

#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창간호 | 2022 여름

포커스 I 한중일 협력과 역사 화해

포커스 II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제관계

동북아역사포커스 창간호 (2022 여름)

---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1 Summer 2022)

## 동북아역사포커스

창간호 2022 여름

발행일 2022년 6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이영호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심호성, 위가야, 조건, 조운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http://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발간사</b>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4
<b>편집자의 글</b>	김현철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6

<b>특별기고</b>	<b>지금, 동아시아를 생각한다: 한중일 협력의 가능성</b>	8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b>한일 협력의 토대: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역사 인식 극복</b>	22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b>포커스 I</b> <b>한중일 협력과 역사 화해</b>	<b>한일 간 공동역사연구와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b>	49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b>‘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의 성과와 제언</b>	62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b>한중 ‘갈등·협력·경쟁’ 관계: 학술교류의 의의</b>	82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b>한중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의 뿌리와 과제: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b>	98
	전인갑 서강대 교수	

<b>포커스 II</b> <b>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제관계</b>	<b>세계유산: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b>	115
	강동진 경성대 교수	
	<b>일본의 강제동원 유적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문제점</b>	132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b>해외의 세계유산 등재: 갈등과 화해 사례</b>	146
	이연경 인천대 교수	

	<b>국제적 갈등의 중심에 선 세계유산, 해법은?</b>	157
	이현경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북아역사포커스』를 창간합니다.

우리 재단은 동북아 역사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내 역사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 창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조사·연구활동, 교육·홍보활동, 교류·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특별히 동북아 역사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학술적 담론을 수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학술지인 『동북아역사논총』, 『영토해양연구』,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를 발간하여 국내외 학계에 양질의 학술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동북아역사재단뉴스』를 발간하여 동북아 역사와 현안에 대한 주제를 쉽게 풀어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매월 2회 「동북아역사리포트」를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동북아 역사 현안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국내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이제 『동북아역사포커스』

---

를 창간합니다.

최근 한일 간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양국 간 관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중 간에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한중일 3국이 상호 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동북아역사포커스』를 마련하려 합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는 역사 갈등 문제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국수주의를 지양하고 개방적이고 보편적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사적 시각도 견지할 것입니다. 논의 범위도 한중일 사이의 역사 현안뿐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까지 접근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대중적이고도 품격 있는 잡지를 지향합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를 통해 국내외 독자들이 동북아 역사문제와 현실 정세를 잘 이해하고 향후 한중일과 동아시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영호

## 편집자의 글

---

『동북아역사포커스』는 2022년 여름호부터 1년에 총 4회 계간지로 발간됩니다. 매호 동북아의 여러 역사 문제와 현안 중 국내외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대주제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글을 모아서 게재하려고 합니다. 매호 실릴 글의 주제는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며, 국내외 학계의 전문가, 유관 기관 및 언론사 관계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에 실리는 글들은 전문적인 학술논문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역사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입니다. 동북아 국가 간 쟁점이 되는 역사 현안과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지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최근 한중일 간 협력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국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먼저 「특별기고」는 국내외 저명 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를 대표하는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각각 한중일 간의 협력과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고, 한중일 간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합니다.

창간호는 특별히 두 개의 대주제를 기획하여 글을 구성했습니다. 「포커스 I」에서는 ‘한중일 협력과 역사 화해’라는 대주제하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몇 년간 한일포럼과 한중포럼을 구성하여 양국 간 교류 협력과 역사 문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온 활동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일·한중 교류사업의 담당자로 참여한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차재복 연구위원이 한중일 교류의 현황을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

---

서 한일포럼과 한중포럼에 각각 대표로 참여한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와 전인갑 서강대 교수가 그 성과로 발간된 도서인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역사 편, 정치 편)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한일포럼과 한중포럼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포커스 II」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제관계’라는 대주제하에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계기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과 해외 등재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동진 경성대 교수,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연경 인천대 교수, 이현경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외국의 사례를 자세하게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강제동원유적 등재 시도를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도가 촉발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역사포커스』에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현지 소식을 전하는 코너도 마련하여 한중일 등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동향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가 동북아의 역사와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편집위원장으로서 『동북아역사포커스』 창간을 위해 애쓴 편집위원들과 출판팀 등 재단 내외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김현철

# 지금, 동아시아를 생각한다

## 한중일 협력의 가능성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이 글은 제목 그대로 지금 여기서 동아시아를 생각하면서 한중일 3국이 협력 가능한 좁은 공간을 찾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둔 미래지향적인 현재다. 다양한 아시아지역 용어 가운데 동아시아의 역사적 성격을 살려 세계 속의 한중일 3국의 위상과 협력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오래전부터 정치철학과 국제정치의 가교탐구에 관심을 가져온 필자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간한 자료 『2020 한중일 협력 개황』을 읽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왜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 협력인가

아시아는 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극동,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 이 가운데 한중일 3국을 포함

---

## 특별기고

하는 용어는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사용했던 극동(Far East)이 있지만 현대 국제정치에서는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러시아와 몽골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한중일 3국이 핵심구성국이다. 동아시아는, 동북아 3국, ASEAN 10개국과 함께 인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까지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넓은 아시아 개념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연속성과 세계정치의 전망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 내부에서도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근대화와 서양화가 겹쳐 정통과 이단, 심지어 문명과 야만의 2분법이 국가정책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은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 있지만, 21세기의 시대정신인 상대화시대의 안목에서 보면 고대 이래 동아시아는 서구와 함께 세계사의 중심지역의 하나로 생존해 왔다. 지금, 한중일 3국은 미국, EU와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정치의 중심축의 하나이고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두 축은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과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의 지역협력이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기구이다. ASEAN은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지역협력체로 오랜 전통과 경험으로 경제교류와 협력이 지역평화에 기여한, 경제평화론의 좋은 사례다.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가장 큰 난제는 동북아 3국 한중일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2,500년 세계정치사에서 서구와 동아시아의 뿌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심에 두면서도  
G2의 한 축인 중국,  
40년 이상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을  
경험한 일본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3국 간의  
쟁점과 접점을 따져  
보고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도의  
정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이다.

를 찾는데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을 빼놓을 수 없고 현대 국제정치에서 구미와 함께 한중일 3국이 중심축이 되는 것은 이 3국이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동도서기(東道西器), 중체서용(中體西用), 화혼양재(和魂洋才) 등 유사한 논쟁을 겪으면서도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일본의 초(超)국가주의, 중국의 반제(反帝)민족주의, 한국의 반식민 저항민족주의 등의 역사적 유산으로 3국의 내셔널리즘이 상충하고 있고 거기에 구냉전과 신냉전이 혼재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동이 겹쳐 한중일 3국 협력을 토대로 하는 공동체 논의는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비관적인 역사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 EU와 함께 한중일 3국의 동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심에 두면서도 G2의 한 축인 중국, 40년 이상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을 경험한 일본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3국 간의 쟁점과 접점을 따져 보고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도의 정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이다. 2019년 현재 한중일 3국의 세계 대비 합산 통계를 보면 인구 21%, GDP 24%, 외환보유액 40%, 교역액 약 19%, 그리고 국방비

---

## 특별기고

가 약 19%이다. 한중일 3국이 각기 세계사에 발신할 수 있는 능력과 매력의 메시지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근대화·민주화 과정에서 두 차례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했다. 하나는 1868년 메이지유신, 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 의한 점령개혁이다. 메이지유신은 자력에 의한 근대화 개혁이고, 미점령개혁은 바깥으로부터의 타력에 의한 민주화 개혁이다. 1980년대에 종속론(dependency theory)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자도 시민혁명이 아닌 메이지유신을 자율적 성장(autonomous growth)의 사례로 평가했고, 미국에 의한 ‘점령민주화’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좌파 진보세력은 물론 평균적인 일본 국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5,000만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7개 나라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이념과 비핵·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 전체주의나 좌우경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리더십이 확보된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와 함께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양태로서의 중용민주주의(Meanocracy) (崔相龍, 2022, 『中庸民主主義』, 筑摩書房)의 카테고리 안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것이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첫 성공 사례다.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 공산 국가들은 붕괴의 도미노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아시아 공산 국가들 가운데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 해석할 것인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40년 만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베트남도 기본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있다. 한때

---

## 특별기고

유교 전통의 국가가 자본주의 친화적이라는, 이른바 유교자본주의론이 있었으나 인구 80% 이상의 불교국가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경제의 보편성은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한국 정부 대표단의 고문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각난다. 환영만찬회 옆 좌석의 김영남 위원장에게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얘기를 하면서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붕괴했지만 아시아 공산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당사국들에게겐 국정 방향의 승패를 가르는 정치과제이고 학문적으로도 도전적인 연구과제가 아닌가?

지금, 중국은 한편으로 세계 제2의 경제력을 정치력으로 전환함으로써 G2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다른 한편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불평등지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본보다 높다는 평가도 있다. 더욱이 중국이 경제, 군사 면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의 길을 갈 것이라는, 각종 중국위협론이 팽배해 있다. 중국은 안팎으로부터의 민주화의 도전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나 성(省) 레벨의 자치 등으로 대응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소련사회주의는 1917년 사회주의혁명 후 70년 만에 붕괴했지만, 1949년 설립된 중국사회주의 정권은 이미 70년이 지났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周恩來), 덩샤오핑(鄧小平) 3인 리더십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파생되는 안팎의 난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3권 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화된 중국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은 디지털 중심의 공산당 일당독재를 무

## 특별기고

기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로 불리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권위주의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1960년 초반 1인당 60불대의 소득에서 시작하여 반세기 만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룸으로써 발전도상국가의 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는 ‘한강의 기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의 민주화는 밑으로부터의 시민혁명에 의한 민주국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의 정보화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수용한 중국식 사회주의국가이고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래 150년의 학습을 통한 선진 민주국가라면 한국은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다. 필자는 한국 민주화의 기적을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Miracle doesn't happen miraculously)”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지금, 한국은 압축성장의 산업화와 각종 과잉민주화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민족의 양극화인 한반도 분단체제하에서 대한민국 안의 이데올로기와 소득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악순환하고 있다. 20세기에 붕괴된 동서냉전이 21세기에든 한반도의 남북냉전과 대한민국 안의 남남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부국이 되었지만 국론 분열의 양극화가 무기 없는 내전 수준으로 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최대 화두였던 국민통합은 새정부가 실천해야 할 최우선 정치과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내의 국민통합 → 남북한의 안정된 평화공존 →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민족, 이데올로기, 소득 등 다양한 양극화의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는 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냉전으로 분단된 나라 가운데 독일은 1990년, 베트남은 1975년 통일함으로써 양극화의 냉전구조를 극복했다.

한반도는 우리 민족이 1,234년간(676~1910) 자력으로 지켜온 통일국가가 아닌가? 20세기 미소 냉전의 산물인 분단체제가 21세기에든 냉전의 현상으로 남은 곳은 한반도뿐이 아닌가? 통일, 그것은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기적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다. 2012년 러시아의 IMEMO는 2022년까지 10년 전망을 한반도 통일의 과정이라고 했지만 국내의 통일대박론, 북한 붕괴론과 함께 설익은 오판이었다. 대한민국 내의 남남갈등은 통일 논의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추긴다. 따라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의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안정된 남북한 평화공존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희망적 관측은 냉철한 정치판단을 흐리게 하고 평화의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사려 깊은 정치지도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한중일 3국 관계에서 체제이념의 차이, 군사안보상의 긴장, 역사적 쟁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능한 협력은 경제교류와 문화교류의 영역이다.

필자는 일본의 호세이(法政)대학과 세이케이(成蹊)대학 교수로 있을 때 많은 일본, 한국, 중국 학생과 학자를 만났는데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그들과의 대화, 토론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동북아공동체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3국 간의 쟁점을 확

인하고 접점을 찾아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한중일 3국이 공유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 또는 학문적인 공통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soft power 협력이 가능한 것인가 등이다.

한중일 3국 관계에서 체제이념의 차이, 군사안보상의 긴장, 역사적 쟁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능한 협력은 경제교류와 문화교류의 영역이다. 외교가 갈등과 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과 평화를 최대화하는 정치행위라면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는 평화만들기 외교와 친화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대국가 관계에서도 경제평화, 통상평화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문화교류의 경우도 문화정체성의 과도한 주장이 갈등과 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필자의 문화평화론에 의하면 당사국이 문화교류를 상호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평화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에서 한일 간 대중문화의 교류에 합의한 것은 외교 영역에서 문화평화를 실천한 선례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이 공유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에 대해서는 17세기 중국의 황종희(黃宗羲), 18세기 조선의 박지원(朴趾源), 19세기 일본의 요코이 쇼난(横井小楠)이 머리에 떠올랐다. 필자는 이 3인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  
에서 한일 간  
대중문화의 교류에  
합의한 것은  
외교 영역에서  
문화평화를 실천한  
선례가 될 것이다.

---

## 특별기고

의 공공철학자가 공유한 실학에 대한 강의로 3국의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설명했다. 3인의 사상은 당시 세계적 수준에서도 높은 교양 지식체계였던 유학에 내재해 있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당시 언어로 말하면 실학이다. 이들 3인은 실학의 관점에서 서양문명을 주체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특히 학술교류에서 공유해야 할 것은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 연구자들의 번역활동에 대한 평가다. 서양학문의 열쇠 개념들이 동아시아 3국의 공통 언어인 한자 언어로 번역됨으로써 3국의 인문, 사회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오늘날 한중일 3국 지식인이 공유하고 있는 학술용어의 대부분이 일본 연구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를테면 철학, 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 학술개념을 3국이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3국의 인문, 사회과학을 비롯한 교양의 폭도 세계적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교양을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으로 한정한다면 단언컨대 한중일 3국 평균적인 지식인의 구미에 대한 교양이 구미의 평균적 지식인의 동아시아 3국에 대한 교양보다 우월했을 것이다. 서양고전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무시는 상당한 부분 무지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3국 간의 쟁점은 체제이념이나 3국의 내셔널리즘의 차이에서 오는 상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상호 인정의 차원에서 이들 쟁점들은 유보하더라도 경제교류나 문화교류의 영역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기능적인 접근이나 중국인들이 잘 쓰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방법으로 가능한 협력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 2.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3국 사무국의 역할

한중일 3국은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 ASEAN+3회의 때 상견례의 정상회의가 열렸을 뿐, 21세기에 들어와 2008년부터 처음으로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다. 제1차 회의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제2차 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회의는 한국 제주에서 번갈아 열렸다. 2019년 제8차 회의가 중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코로나사태가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제9차 한중일 제3국 정상회의는 2022년 한국에서 신정부 주도하에 열릴 가능성이 있고 신정부는 한중일 3국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3국 간에는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71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3국 정상회의와 연계한 회의체로 한중일 FT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교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3국 국민의 상호 학습을 위해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다루고 있다.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2009년 중국에서 열린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3국 협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무국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듬해 2010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한국에 사무국을 설립한다는 3국의 합의에 따라 2011년 사무국 설치에 대한 3국협정 제1조(사무국은 대한민국에 위치한다)에 따라 정식으로 출범했다. 협력사무국은 한중일 3국 관계의 틀 속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상징하는 외교공간이다. 사무국 설립에 대해서 중국이라면 일본이, 일본이라면 중국이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한국이라면 중국과 일본이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다. 앞으로, 한중일 관계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건설적인 외교공간으로 만드는 역할은 한국의 외교력에 달려 있다.

만약 예정된 순서대로 올해 2022년 한국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제8차 회의에서 제기된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분석적 이해와 합의 가능한 대안을 찾아 한중일 협력에 대한 한국 신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한중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한중일 3국 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국 정상회의에서 비핵·평화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한 것인가? 한일 간에는 비핵·평화 연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핵보유국인 중국과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중국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3국의 비핵·평화 연대는 불가능하고 비핵공동체는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3국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이외의 군사안보상의 합의는 도출할 수 없는 것인가?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보면 모든 핵보유국이 핵병기를 전쟁 억지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한중일 3국 간에 전면 전쟁의 가능성

올해 2022년  
한국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제8차 회의에서  
제기된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분석적  
이해와 합의 가능한  
대안을 찾아 한중일  
협력에 대한 한국  
신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한중일 3국의 정치상황이라면 비핵공동체는 아니더라도 부전(不戰)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그 노력만큼 3국 협력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은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자유 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한다.

3국 간에 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부전공동체의 정치환경을 형성하면서 3국 간 FTA의 실현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제도화되면 안정적 평화공존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한국은 고통스러운 냉전의 유산과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위치하고 있다. 신냉전이 과거 동서냉전의 복사판이라면 한국 외교의 선택이 냉전시대와 다른 것이 없다. 미중의 갈등과 대립으로 퍼지고 있는 신냉전 개념의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의 ‘신’의 의미는, 신냉전이 지난 세기 미소냉전에서 보인 것처럼 세계적 수준에서 이데올로기 및 군사력의 조직적인 양극화가 아니라는 함의가 있다. 우리가 냉전과 신냉전의 차이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한국 외교가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받아들이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 간에도 건설적인 협력의 함의가 도출될 수 있다. 21세기 신냉전

첫째, 한중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둘째, 한중일 3국은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한다.

상황하에서도 20세기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는 지속 가능하다.

셋째, 한중일 3국은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학습을 촉진한다.

문화영역에서 학술교류에 더하여 예술교류는 동아시아 3대 문화국가인 한중일 국민의 상호 학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신선한 문화적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음악예술 분야에서 3국의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예술교류는 빈번히 있었지만, 음악이야말로 한중일 3국이 지구촌 곳곳에 전파할 수 있는 soft power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1세기의 출발점에서 한중일의 음악연주자로 구성된 상설오케스트라를 설립하여 연중 세계여행을 하면서 3국의 전통음악과 서양고전음악을 연주하면 세계인들이 동아시아 3국의 문화적 향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칭 BESETO 오케스트라 창설을 위해 지난 20년간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전직 총리,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 지도자, 재계, 학계, 언론계 지도자들과 상의했고, 필자가 한국 국회의장 중국 방문단 고문으로 방중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도 뜻을 전했다. 머지

셋째,  
한중일 3국은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학습을  
촉진한다.

---

## 특별기고

앞은 장래에 3국의 정치지도자와 전문예술인이 합의하여 음악예술을 통한 3국의 soft power 협력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 **최상용(崔相龍, Choi, Sang-yong)** 고려대 명예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도쿄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국평화학회 창립회장, 주일본대사 등을 지냈다.

# 한일 협력의 토대

##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역사 인식 극복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東京大) 명예교수



### 1. 시작하며

나는 2019년에 『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韓国併合110年後の眞実)』이라는 짧은 책을 내며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1951년,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강화 조약을 맺고 독립한 일본은 직후부터 대한민국과의 국교 수립 교섭을 개시하였다. 그 교섭 중에 한국 측이 병합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의 유효성을 주장해 마지않았다. 1965년 한일조약을 체결할 때에 이 원칙적인 대립은 뒤로 미루어졌다. 양국이 합의한 정식 영문 조약문은 쌍방이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자국어로 (각각) 번역해서 제2의 정식 문서로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자국민에게 설명한 것이다.

기본조약 제2조는 영어 정문에서는 “It is confirmed

1965년의  
한일조약은 양국의  
역사 인식이  
정반대라는 것을  
드러낸 결함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일 양국 사이에서  
역사 인식상의  
대립이 표면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였다. 이것이 일본어로는 “천구백십년 팔월 이십이일 내지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제 무효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번역되어 계속 유효하였던 것이 지금은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어로는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번역해서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조약 비준 국회에서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당시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약인 이상 이것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약은 각각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유효한 조약의 체결, 양자의 합의에 기초한 병합이므로 사죄도 반성도 필요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비동의를 한국 국민의 보편적인 입장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1965년 한일조약은 양국의 역사 인식이 정반대라는 것을 드러낸 결함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일 양국 사이에서 역사 인식상의 대립이 표면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sup>1</sup>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나는 병합조약 체결의 진실 해명에 나섰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정부[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는 병합 실행 시에는 특히 조칙을 발표하여 병합 사실을 내외에 선포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병합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선포하려 했지만 정부의 다른 일각[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郎)]은 “제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이 자의적으로 내놓는 형식에 의해 병합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전자의 조칙 병합론이 아닌 후자의 조약 병합론으로 결정되었다.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가 통감이 되어 한국으로 갔고, 8월 16일 한국 정부 총리 이완용에게 병합을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조약은 병합 방식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18일에는 일본 측이 준비한 ‘조약문’과 ‘전권위임 황제 조칙문’을 이완용에게 건네주고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완용은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8월 22일 데라우치 통감은 어전 회의에서 한국 황제는 전권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제는 이완용에게 설명을 듣고 데

1 和田春樹, 2019, 『韓国併合110年目の真実』, 岩波書店, 2~4쪽(와다 하루키 저, 남상구·조윤수 역, 2020, 『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 지식산업사, 16~18쪽).

## 특별기고

라우치가 건네준 ‘전권 위임 황제 조칙문’을 한글과 한문으로 고쳐 쓴 ‘통치권 양여 귀관 조칙’에 서명하고 국새를 찍어 이완용에게 전달했다. 이때 이완용은 처음으로 ‘조약문’을 황제와 관료들에게 보여줬다. 2시간 후, 이완용은 통감 관저에서 데라우치 통감과 함께 병합조약에 서명했다. 필자는 이 조약 서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결국 병합조약의 조인은 대등한 조약을 맺을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끼리 지배국의 대표자와 그 지휘 감독을 받는 피지배국의 관리가 연출한 조약 조인 연극, 연기에 불과하였다. 통감 데라우치가 다시 한번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일본 국가의 대표자였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한 데라우치가 서명하였다. 여기까지는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명한 대한민국 총리대신 이완용은 이 나라의 외교와 내정을 지휘하는 통감 데라우치의 명령에 따라 그 허가를 받아서 데라우치에게 부여받은 황제의 전권 위임장 칙서에 황제의 서명과 옥새를 받아 데라우치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데라우치에게 부여받은 병합조약에 서명하였다. 서명은 분명히 자신의 손으로 하였지만, 모든 것은 데라우치 통감의 명령,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완용은 데라우치의 에이전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약 체결이라는 것은 데라우치가 데라우치라고 서명한 1인 2역의 연극, 1인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봐도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효력을 발생해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sup>2</sup>

이 조약 체결은 공표되지 않았고 비밀에 부쳐졌다.

7일 후인 8월 29일, 일본 천황의 한국병합조서가 발표됐다. “짐은 한국 황제 폐하와 함께 … 한국을 일본제국으로 병합하고 이로써 시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

## 특별기고

한일조약 제2조에  
대해서는 한국 측  
해석이 맞고 일본  
정부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국으로 병합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병합 조약을 공표했다.<sup>3</sup>

즉, 병합조약이 조인되었다는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병합은 천황의 조서에 의해 실행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일조약 제2조에 대해서는 한국 측 해석이 맞고 일본 정부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한 결과, 나는 제2조에 대한 일본 측의 해석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제2조 문제를 재론하게 된 것이다. 한일조약 체결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자.

## 2. 한일회담 시작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일본은 독립한 한국과 국가 관계를 시작해야 했다. 이 과제는 36년간에 걸친 조선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청산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생겼고, 전쟁 중이었다. 미국은 일본이 대한민국과 교섭해서 국교를 수립하고 이 나라를 지지하고 원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 和田春樹, 2019, 위의 책, 44쪽(한국어판, 110·113쪽).

3 『官報』號外, 1910.8.29; 『東京朝日新聞』1910.3.30, 7면.

4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和田春樹, 1992, 『歴史の反省と經濟の論理-中國・ソ連・朝鮮との國交交渉から』,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現代日本社會』 7, 東京大學出版會; Wada Haruki, 1998, "Economic Cooperation in place of Historical Remorse: Japanese Settlements with China, Russia and Korea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ese Society*, Vol. 2, Oxford University Press; 李元德, 1994, 『日本の戦後処理外交の一研究-日韓正常化交渉(1951-65)を中心に』, 東京大博士論文; 高崎宗司, 1996, 『検証日韓会谈』, 岩波新書; 太田修, 2003,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

한국 정부는 대일 강화에 연합국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태평양전쟁에서 한국은 일본과 정식으로 교전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이익은 미국이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화회의 참가를 거부했다. 다만,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평화조약을 수정했다. 먼저 제2조 (a)에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결정됐다. 그리고 제4조 (b)에 일본이 스스로 포기한 지역에서 미국 군대에 의해 또 그 지령에 의해 시행된 일본국과 국민의 재산 처리 효력을 승인하는 것이 규정됐다. 이는 미군정에 의해 남한의 일본 국·공유 재산과 사유재산이 접수되어 한국 정부로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이 이것을 인정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측은 이 규정을 받아들였지만, 그 합의에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sup>4</sup>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이전부터 한일 제휴를 바라고 있었다. 한국전쟁 전인 1950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해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를 만난 것도 맥아더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배제된 한국과 일본의 교섭이 개시되기를 바란 사람 또한 맥아더였다. 1951년 8월 16일, 총사령부는 한국

정부에 미국이 한일 교섭을 알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 정부는 9월 18일, 미국에 알선을 의뢰했다. 총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의 뜻을 전했다. 9월 29일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한다는 취지로 회답했다.

한일 예비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GHQ 외교국의 한 공간에서 시볼트(W. J. Sibolt) 국장 입회 하에 시작됐다. 한국 대표는 양유찬 주미대사, 일본 측 대표는 이구치 사다오(井口貞夫) 외무차관이였다. 개회에 앞서 양유찬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한 개회 연설을 낭독했다.

우리는 극동의 평화를 바란다. 한일 양국은 지금은 친선 우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은 일본을 침략한 역사는 없지만 일본은 한국을 늘 괴롭히고 침략해왔다.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된 행위를 해왔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다. 학살, 고문, 징용, 공출 등의 폭력과 불법 행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민족을 분노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일의 원한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국의 새로운 출발을 기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난날 당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일도 없다. 지금은 화해하자

(Let us bury the hatchets).<sup>5</sup>

<sup>5</sup> 유진오, 「한일회담」(23), 『중앙일보』 1983. 9. 26.

일본 측이 어떠한 인사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다만 지바 고(千葉皓) 외무심의관이 “Let us bury the hatchets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한국 측 출석자 유진오는 회상하고 있다. 어쨌든 이 예비회담은 이 해 12월 4일까지 계속되었고 한국 측은 기본관계, 청구권 문제 등 본격적으로 교섭을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법적 지위와 선박 문제를 협의하는 것 이상은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자세를 보여서 끝이 났다. 1952년 2월부터 본교섭을 개시하는 것만이 합의됐다.

일본 측의 태도는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품게 했다. 회담 후, 이승만 대통령은 재외공관에 한일 예비회담을 설명하는 각서를 보냈는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요망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에 군대를 파견하라는 신청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한 및 현재와 미래에 걸쳐 우리를 공정히 다룬다는 새로운 결의의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증거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일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분명한 증거야말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줄 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의 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sup>6</sup>

6 李庭植 著, 小此木政夫·古田博司 譯, 1989, 『戰後日韓關係史』, 中央公論社, 55쪽.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점에 대해서 청산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전에 일본의 일부였던 부분이 독립국이 되었고 현재는 한국전쟁 중이다. 그런 나라와 국교를 수립해야만 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 3. 한일 본회담 시작

한일회담 본회담은 1952년 2월 15일에 도쿄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측의 전권은 종전 시 외무차관이었던 마쓰모토 슌이치(松本俊一)가 맡고, 여기에 현직 이구치 사다오(井口貞夫) 외무차관,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 조약국장, 와지마 에이지(倭島英二) 아시아국장이 대표로 참가한 상당히 큰 규모의 전권단이였다. 한국 수석 대표는 김용식으로 바뀌었다. 회담 2일째인 16일 회담에서 일본 측은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우호조약 초안’을 제출했다. 그 제1조는 양국은 ‘동아 및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협력한다’였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점에 대해서 청산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전에 일본의 일부였던 부분이 독립국이 되었고 현재는 한국전쟁 중이다. 그런 나라와 국교를 수립해야만 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국 측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 3월 5일의 제4회 기본관계위원회에 한국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조약(안)’을 제출했다. 제3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구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라는 것이

7 李元德, 1994, 앞의 글, 42~43쪽; 太田修, 2003, 앞의 책, 83~85쪽.

었다.<sup>7</sup>

이 제3조를 기본조약안에 넣은 경위에 대해서 유진오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가 한일조약의 무효 확인을 기본조약에 굳이 명문화하려는 것은 실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자존심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병합”이라는 국민적인 치욕을 받았지만, 양국 관계를 새롭게 수립함에 있어서 문서상으로도 그러한 굴욕의 역사를 불식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제3조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특별 지시에 의해 각국의 선례를 검토하여 성안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조항이었다.<sup>8</sup>

이 제안을 받고 일본 측은 3월 22일에 이르러 ‘우호조약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는 전문에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 관계를 견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삽입하여 “장래에 무효를 규정한다”라고 썼다. 한국 측의 제3조는 인정할 수 없지만, 국교 정상화 이후 무효가 된다는 식으로 수정한다면 받아들일겠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합병조약은 일본의 침략적 불법 행위이므로 ‘처음부터 무효’

8 유진오, 「한일회담」(50), 『중앙일보』 1983.10.27.

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일본 측 안을 거부했다.

4월 2일에는 공동 시안으로 ‘기본적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안’을 고려하는 방안이 시도됐다. 내용은 일본 측이 낸 수정안과 같았지만 구 조약 무효 확인 조항은 전문을 “일본국과 구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 관계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로 수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장래에 무효’를 주장하며 한국 측과 대립하였기 때문에 기본조약 논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sup>9</sup>

제1차 회담에서 가장 대립하였던 부분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4조 (b)의 미군정에 의한 처분 효력의 ‘승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점이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관점에서 불법적 지배로 축적된 일본의 재산은 모두 비합법적 성질을 띤다고 생각했고, 미군정 처분에 의해 일본은 일본인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매각이 되었다면 그 사실 자체는 승인하나 매각 대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제1차 회담은 4월 21일에 결렬되고 말았다.

9 高崎宗司, 1985.9, 「日韓會談の経過と植民地化責任-1945年8月-1952年4月」, 『歴史学研究』, 10~11쪽; 太田修, 2003, 앞의 책, 86쪽.

일본 측은 사태의 타개를 바라며 1953년 4월 15일부터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를 수석 대표로 하여 제2차 회담을 시작했다. 사전 작업이 계속됐고 여름휴가 후인 10월 6일부터 재개되었다. 제3차 회담이다. 하지만 10월 15일 청구권 위원회에서의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결렬됐다.

구보타는 한국 측이 먼저 일본의 재한 자산 접수에 대해서 원래는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 요구를 삼가고 있으므로 “일본 측이 청구권을 철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에 반론했다. 그는 한국 측이 그렇게 말한다면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일본은 36년간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바꾸거나, 철도를 깔거나, 논밭을 많이 늘리는 등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치 일본이 점령하지 않았으면 한국인은 잠자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점령되지 않았다면 한국인은 스스로 근대 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구보타 전권은 자신의 외교사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으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점령되어 더욱 불쌍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이 그러면 왜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노예 상태’라고 말하고

한국 측이 그러면 왜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노예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일본은 카이로 선언을 받아들인 것이냐고 질문하였다.

있는 것인가, 왜 일본은 카이로 선언을 받아들인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보타는 카이로 선언은 “전쟁 중 흥분 상태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sup>10</sup>

구보타가 말한 것은 구보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의 입장과 한국 측 입장은 원칙적으로 대립했다. 한국 측은 10월 21일 본회담에서 구보타 발언을 5항목으로 정리하고 그 철회를 요구했다. 구보타는 이를 거부하였고 회담은 결렬됐다

일본의 국내 여론은 전부 한국 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일본 정부도 아사히 신문도 야당의 양파 사회당도 1분과 회의에서의 ‘사소한 언사’를 ‘고의로 왜곡’해서 회담을 부당하게 결렬시켰다고 단정지었다. 나는 당시 지방의 일개 고등학생이었으나 이 거국적인 한국 비난을 납득할 수 없었다. 나는 일기에 “한국 측 대표가 말한 것처럼 ‘옛날 일은 흐르는 물에 흘러보내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일본 측이 가질지 말지는 한일회담의 기초이고 근본이며 이에 관해 한국 측이 ‘당분간은 양보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썼다. 그러한 목소리는 분명히 소수파였다.<sup>11</sup>

구보타 발언으로 한일회담은 4년 동안 결렬되었다. 미국의 개입으로 1957년 12월 31일에 후지

10 和田春樹, 1992, 앞의 글, 314쪽; Wada Haruki, 1998, op. cit., p. 132.

11 和田春樹, 2006, 『ある戦争精神の形成(1938-1965)』, 岩波書店, 166~168쪽.

---

## 특별기고

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朗) 외무대신과 김유탉 대사는 구보타 발언과 일본의 재한 재산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철회하고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제4차 회담은 1958년 4월 15일부터 시작되어 1960년 4월까지 이어졌다. 이 회담은 이승만 대통령을 타도한 4월 혁명으로 중단되었다. 1960년 10월 25일부터 시작된 제5차 회담은 1961년 5월 15일, 박정희 등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중단되었다. 결국 한일회담은 박정희 정권 아래인 1961년 10월 20일부터 1964년 4월까지의 제6차 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1964년 12월 3일, 도쿄에서 마지막 제7차 회담이 시작됐다. 제7차 회담의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김동조, 일본 측 수석 대표는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였다. 다카스기는 미쓰비시(三菱)전기 상담역을 역임한 경제인이었다. 회담 개시 직후인 1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숨기지 않고 표명했다. 이것이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에 보도되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다카스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형님 격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크게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36년간의 통치에 관해서 사과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감정으로서 그러한 말은 할 수 없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좋은 일을 해왔다. 일본으로서는 조선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한 일이다.

과거를 말하면 그쪽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있겠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 그러므로 과거를 다시 문제 삼는 일은 좋지 않다. 특히 일본은 친척이 되었다

## 특별기고

한국 측은 ...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된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be null and void”였다는 표현을 할 것을 주장했다.

는 생각으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sup>12</sup>

14년간 지속된 한일회담이 마지막 타결에 이르는 단계에서 전권 대표가 된 사람의 발언이다. 절망적인 정신적 대립 속에서 협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 제7차 회담의 중심은 제1차 회담 이후 조금도 논의되지 않았던 한국이 제안한 기본조약 문제였다. 기본관계조약으로 하자는 한국 측의 주장은 이미 받아들여져 있었다. 전문에 대해서 한국 측은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에 대해서 쓸 것을 주장했지만 일본 측이 반대하여 한국 측이 양보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병합조약의 무효 문제와 한국 정부의 관할권 문제, 유일 합법성 문제로 의견이 대립했다.

한국 측은 제1차 회담에서 제안한 제3조를 그대로 제2조로 제안했다.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된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be null and void”였다는 표현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조항이야말로 양국 간의 과거 관계를 청산하였다는 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대한민국 성립까지는 병합조약이 유효하였다는 생각에서 “have become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주장

<sup>12</sup> 『アカハタ』 1965.1.10, 17, 21; 『동아일보』 1965.1.19.

했다. 유효한 조약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통치는 합법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그러한 조약 및 협정이 이제 와서 효력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굳이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가능한 한 과거의 행적을 들추어 내려고 하지 않는 일본 측의 태도 표현이라고 간주된다.”<sup>13</sup> 제2조 문제는 합의를 얻지 못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한 병합조약은 ‘null and void’였다는 조항을 박정희 대통령 정부도 변함 없이 계속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계속 거부한 것이다.

#### 4. 기본조약에 관한 최종적 합의

이 대립을 타개하기 위해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대신이 한국을 방문했다. 기본조약의 쟁점 해결이 목적이었다.

1965년 2월 17일, 시나 외무대신은 마지막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시나 외무대신은 거기에서 준비된 성명을 읽었다. “양국 간의 오랜 역사 속에 불행한 시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우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sup>14</sup> 일본 측에는 식민지 지배를 반성한다는 입장은 없으므로 불행과 유감에 반성이라는 단어

<sup>13</sup>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 『한일회담의 기본 관계』(1965년 3월 20일), 『한일관계자료집(韓日關係資料集)』 제1집, 149~150쪽.

를 더한 것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반성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다소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한국은 엄중한 경계 태세로 시나 외무대신을 맞이했다. 도착 3일째인 2월 19일, 대규모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서울에서 일어났다.

그 전날인 18일, 시나 외무대신과 이동원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은 구 조약의 무효 문제에서 한국 제안에 ‘already’라는 한 단어를 넣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이에 따라 쌍방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김동조는 이 타협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시나는 이 텍스트를 받아들였다. 제2조는 일본어 번역에서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제 무효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번

14 김동조, 「한일회담」(255), 『중앙일보』 1984.7.4.

---

## 특별기고

역됐다. 이 일본어 번역문을 보면 계속 유효였던 것이 지금은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 한국 측이 제안하는 제2조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한국 측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번역했고, ‘당초부터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 5. 한일조약 체결에 대한 양 국민의 반응

한일조약 체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대운동은 2월의 시나 외무대신 방한 즈음부터 고조되기 시작했다. 3월에는 야당인 민주당·민정당을 중심으로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결성되어 한층 더 고조되었다. 4월부터는 학생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났고 5월에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는 가운데 1965년 6월 22일 마침내 도쿄에서 한일조약 가조인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국회의 조약과 제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1965년 8월 3일에 열렸다. 이날,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기본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치욕적인 구한말의 제 조약을 무효로 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양국의 기본적인 새로운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인 만큼 ‘기본조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종일관 강력하게 내세움으로써 결국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고, 특별히 조약 내용의 핵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 조약의 무효 확인 조항에서 근 반세기의 뼈에 사무치는 불행한 역사를 청산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모든 치욕적인 조약은 이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요구의 주장을 관철하였다”라고 설명했다.<sup>15</sup>

국회에서의 각 당 의원 연설 가운데 제2조 문제를 언급한 사람은 김대중 의원이었는데, 김대중 의원도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null and void’라고 하면 “맨 처음부터 무효다”라고 말한 것에 “나도 이 의견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라고 말했다.<sup>16</sup> 조약의 이 부분에는 찬성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일조약을 매국적인 조약이라고 비난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민간 단체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까. 1965년 7월 1일 기독교 목사, 교역자의 성명은 제3항에서 “한일 간제 조약의 무효화 시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일본 측에 을사·경술 등 국권 강탈 행위를 합법화하는 구실을 부여하여 항일 선열의 정신적 유산에 오점을 초래한 점 등은 국민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sup>17</sup> 7월 9일 문학자들의 성명에서 2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같은 날 역사연구 3단체가 낸 성명도 마찬가지다.<sup>18</sup> 그리고 7월 12일에 낸 서울의 대학교수단 성명에서는 첫째로 “기본조약은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 약화 및 제 협정의 불평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굴욕적인 전제를 설정해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다

1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 앞의 책, 207쪽.

1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 위의 책, 323쪽.

17 統一朝鮮新聞社, 1965, 『統一朝鮮年鑑 1965-66年』, 669~702쪽.

18 統一朝鮮新聞社, 1965, 위의 책, 702~704쪽.

지 정확하지 않은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다.<sup>19</sup>

대체로 기본조약 제2조는 운동권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일본에서는 비준 국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위원의 답변이 있었다. 11월 25일 참의원 위원회에서 후지카시 마사토(藤崎万里) 조약국장은 제2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어의 null and void라면 당연히 당초부터 무효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써(もはや)’라든지 ‘이미(すでに)’라든지 그러한 단어가 붙어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유효였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라면 ‘벌써 무효’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 시점의 문제인데 한일병합조약은 대한민국 독립 시기인 1948년 8월 15일에 실효되었고 병합 이전의 제 조약, 협정은 각각 유효기한 만료에 따라 또는 병합까지 존속되어온 것은 병합시에 실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up>20</sup>

19 統一朝鮮新聞社, 1966, 위의 책, 704~707쪽.

20 外務省 條約局 條約課, 1966, 『日韓條約国会審議要旨』, 96쪽.

그리고 11월 27일 참의원 위원회에서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郎) 아시아국장은 한국 측의 제안 의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특별기고

일본 정부는  
기본조약 제2조는  
일본 측의 주장대로  
처음에 유효했던  
것이 독립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상대방이 그것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하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려는 의향은 없다는 점은 … 상대방인 교섭 당사자도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대방도 말하고 있듯이 이른바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 국민의 진심(正氣), 진심의 상징으로 단순히 넣는다는 이른바 정치적, 국내 정치적, 감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국내 정치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해도 법리론상으로 지나치게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이 되는 것은 조약 작성에서 피해야 하므로 요컨대 예전에는 한때는 유효한 시대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already’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적어도 한때 유효하였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sup>21</sup>

일본 정부는 기본조약 제2조는 일본 측의 주장대로 처음에 유효했던 것이 독립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이해에서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유명한 국회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다. 유효한 조약, 양자의 합의에 기초한 병합이었으므로 사죄도 반성도 필요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

일본의 민간 반대운동 가운데 나온 문서를 보

<sup>21</sup> 外務省 條約局 條約課, 1966, 앞의 책, 96~97쪽.

면 기본조약 제2조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거의 없다. 한일조약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를 단죄하는 정신으로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예리하게 지적한 역사학연구회 주최의 역사가 모임 성명(9월 11일)에서도 기본조약 제2조 문제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sup>22</sup>

## 6. 제2조 조문이 의미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점에서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국 측, 일본 측의 두 가지 해석이 성립되는 것인가, 둘 다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보자.

먼저 ‘VOID’는 친숙한 영어 단어다. 여권이 만료되어 무효가 되었을 때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면 예전 여권에 ‘VOID’ 도장이 찍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영일사전을 보면 “비어 있는, 살던 사람이 없어지다, 내용물이 비다” 등의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무효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동사로 쓰면 “무효로 한다”, “취소한다”이다. 그러므로 유효였던 것을 무효로 한다, 유효였던 것이 무효가 된다고 할 때 ‘void’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조에 병합조약은 ‘void’였다고 한다면 일본 측의

<sup>22</sup> 和田春樹, 2006, 앞의 책, 343~346쪽. 이 성명의 원안은 필자가 기초하였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기본조약 제2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 특별기고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null’이 더해져서 ‘null and void’라고 하면 『신영일대사전(新英和大辭典)』에서는 “〈계약 등〉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전혀) 무효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되어 있다. 즉, 본질적, 원천적으로 당초부터 무효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한국 측의 해석이 옳바르다고 말할 수 있다. ‘already’라는 단어를 넣은 것만으로는 일본 측에 유리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한국병합조약이 무효라는 문장에서 한국, 일본 해석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자. 한국병합조약의 전문과 제1조,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 서로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할 것을 바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수 밖에 없음을 확신해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고 … 각 그 전권 위임으로 임명하여 … 위 전권 위원은 회동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약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한국을 완전히 일본제국에 병합할 것을 승낙한다

제3조는 한국의 황제 이하에 명예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조항이므로 검토에서 제외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병합조약이 ‘null and void’라는 것은, 전문도 제1조도 제2조도

---

## 특별기고

‘null and void’라는 이야기가 된다. 일본 측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독립, 건국했으므로 병합조약이 ‘null and void’가 되었다고 한다면 전문도 제1조도 제2조도 당초에는 유효, 합법이었지만 독립 후에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

먼저 전문은 양국 황제는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으로 병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확신하여 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문장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확신하고 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도중부터 무효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확신하고 조약을 맺었지만 한국이 독립한 결과, 이렇게 확신해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게 되므로 논리가 깨지고 만다.

제1조는 어떠한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한다면 한국 황제가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양여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도중부터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 황제가 통치권을 양여한다고 신청했지만 한국이 독립하였기 때문에 양여를 신청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도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제2조는 어떠한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한다면 일본의 황제는 양여를 수락하고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 일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도중부터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 일본의 황제는 양여받았으므로 병합했지만 한국이 독립하였으므로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한국병합조약은 1910년의 시점에서 한국과의 합의에 의해 병합한, 한국이 병합해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병합하기로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한다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한국이 독립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효

기본조약 제2조는 병합조약이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 병합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일 양 정부가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즉, 한국 측의 해석이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이고 일본 측의 해석은 본질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였지만 도중에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한국이 독립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어 문장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만약 병합조약의 본문이 “한국은 일본으로 병합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었다면 이 조약은 내용상 당초에는 유효했고 그 후 무효가 되었다는 게 가능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병합조약이 아니라 천황의 병합 칙서라면 병합 당초에는 유효했고 한국이 독립하였으므로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합조약은 병합이 합의에 의해, 한국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병합 경과를 설명한 문서이므로 당초에는 옳았던 설명을 나중에 취소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already’라는 부사가 들어가든 아니든 기본조약 제2조는 병합조약이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 병합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일 양 정부가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즉, 한국 측의 해석이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이고 일본 측의 해석은 본질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측은 한일 교섭에서 처음부터 이승만 대

---

## 특별기고

통령의 생각에 따라 한국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였다는 점을 일본 측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한일 국교 수립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다. 그것은 1910년의 한국 병합이 한국 측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즉 힘에 의해 일본군의 점령에 의해 한민족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된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이 조항에 저항을 계속했지만 결국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already’ 한 단어를 가지고 병합조약은 당초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끌어냄으로써 일본 국민에게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해왔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외교 위조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한일조약의 올바른 해석 위에서 한일 관계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번역: 김보라

---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Wada Haruki) 도쿄대 명예교수

도쿄대 문학부 졸업.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및 소장 등 역임했다. 전공은 소련·러시아사, 한국근현대사다. 『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 『한국전쟁』, 『역사가의 탄생』,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I·II 등의 저작이 있다. 1970년대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한국 민주화 지원운동,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등 현실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본의 대표적인 실천하는 지식인이다.

포커스 |

# 한중일 협력과 역사 화해

---

한일 간 공동역사연구와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의  
성과와 제언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한중 '갈등·협력·경쟁' 관계:  
학술교류의 의의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한중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의  
뿌리와 과제: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전인갑 서강대 교수



# 한일 간 공동역사연구와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1. 머리말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1년 시작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때부터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양국은 때때로 불거진 역사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왔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한일 역사공동연구였다. 이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공동연구가 제시됐다. 2001년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로 표기)이 만든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한일 양국 정부는 2002~2010년까지 '한일역사공동연구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연구가

추진됐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거듭한 2015년 이후에는 이러한 노력조차 자취를 감추었다. 이 글에서는 한일 간 역사 갈등과 공동역사연구라는 흐름 속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했던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2018~2019)의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일 간 역사 갈등과 역사공동연구 경위

### (1) 한일 국교정상화와 역사 인식 문제 봉합

1951년 10월 20일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됐다. 회담이 시작된 이후 일본 정치인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문제를 야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1953년 10월 6일 제3차 회담에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수석대표가 한 발언이다. 그는 “일본은 36년간 한국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며 “만약 일본이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돼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회담이 4년 6개월이나 중단됐다. 1965년 한일협정은 이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 정당화론을 공적으로는 봉합한 채 체결됐다.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은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제국주의는 ‘영광의 제국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한일협정 체결 직전인 1965년 2월 20일 발표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식민 지배에 대해 “그와 같은 과거 관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의원연맹은  
민간기구로  
한일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2) 1982년 일본 교과서 파동과 공동연구 모색

한일 간의 역사 인식 차이가 양국 외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것은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이었다. 중국 ‘침략’을 ‘진출’로 수정 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나, ‘3·1운동’이 ‘폭동과 데모’로 수정되는 등 일본의 식민 지배와 관련된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동년 8월 26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은 ‘근린제국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근린제국조항이란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계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은 일본 정부가 일본 교과서를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와 집필자 일부가 독일과 폴란드 교과서 대화에 주목했다.<sup>1</sup> 그리고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의원연맹은 민간기구로 한일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sup>2</sup> 한국 여론은 일본의 교과서 기술 수정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이 없는 한 무의미

1 1982년 일본 교과서 파동에서 1997년까지의 한일 교류는 신주백, 2014, 『역사 화해와 동아시아형 미래 만들기』, 선인 참고.

2 『조선일보』 1982.7.30, 8.1.

한 조치라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sup>3</sup> 결국 공동 연구는 실현되지 못했으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연구가 제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다양한 공동 연구와 학술교류가 시도됐다. 1991~1993년까지 민간 차원에서 교과서 공동연구가 추진되어 서울과 도쿄에서 4차례에 걸쳐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일본의 국제교육정보센터도 1991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 서울시립대학(역사교과서연구회)과 도쿄가쿠게이대학(역사교육연구회)이 공동교재를 만들기 위한 교류를 시작했다.

### (3) 일본 정치가의 ‘망언’과 ‘한일 역사연구 촉진에 관한 공동위원회’ 출범

1990년대 이후 일본 총리의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표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 역사 인식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가 1995년 8월 15일 발표됐다.<sup>4</sup>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본 고위 인사들의 ‘망언’은 계속됐다. 1995년 11월 7일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청 장관이

3 『동아일보』 1982.8.2; 『조선일보』 1982.8.5.

4 남상구, 2013,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46.

위원회는 ‘양국 및 양국 관계에 관한 역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양국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5 『한겨레신문』 1995. 11.16.

6 안병준, 「바람직한 한일관계」, 『조선일보』 1995. 10.14; 사설 「『망언-사과』 악순환 이제 끝내야」, 『경향신문』 1995.11.19.

7 일본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jcie.or.jp/japan/nenji97/d08.htm](http://www.jcie.or.jp/japan/nenji97/d08.htm)).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은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다. 일본 정부는 개별 정치가들의 ‘망언’에 전향적으로 대응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에토 장관의 ‘망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년 11월 15일 개최된 공노명 외무부장관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의 회담에서 양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sup>5</sup> 1982년 일본 교과서 파동 당시와는 달리 여론도 공동연구를 지지했다.<sup>6</sup> 지지의 논리는 한일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그 수단은 공동연구라는 것이었다. 이 합의를 실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1997년 7월 ‘한일 역사연구 추진에 관한 공동위원회’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위원회는 ‘양국 및 양국 관계에 관한 역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양국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sup>7</sup>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에서도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 “한일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추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일 간 지적 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회 제언을 받아들여 2001년에 ‘한일역사가회의’가 설치됐다. 이 회의는 양국 역사연구자의 상호 이해를 넓히는 것이 목적으로 지금까지 1년에 1회씩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회의비용은 양국 정부가 지원하나 내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 (4) ‘새역모’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한일 역사공동연구

2001년 4월 ‘새역모’가 만든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급격히 경색됐다.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양국은 2001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2002년 3월 3개 분과(고대사, 중근세사, 근현대사) 22명으로 구성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제1기)를 발족했다. 제1기 위원회는 2005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 2007년 6월 34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때의 3개 분과에 더하여 교과서위원회를 신설했다. 제2기 위원회는 2010년 2월 활동을 종료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기구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기구를 통해 공동연구를 하고, 한일 간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포커스 I

### 2000년대 민간 차원의 한일 공동연구 성과물

집필자	도서명	출간 시기
1 (한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일본)히로시마현 교직원노동조합	조선통신사	2005.4.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	2012.11.
2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2005.5.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	2012.5.
3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2005.10.
4 (한국)전국역사교사모임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마주 보는 한일사 1, 2(전근대 편)	2006.8.
	마주 보는 한일사 3(근현대 편)	2014.6.
5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일본)역사교육연구회	한일 교류의 역사	2007.3.

통해 공동연구를 하고, 한일 간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역모’ 파동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도 공동연구와 교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2년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는 공동연구를 토대로 『미래를 여는 역사』(2005)와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012)를 3개 국어로 발간했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하와이대학출판부에서 영문판으로 발간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출범 이후 『미래를 여는 역사』 후속 편의 발간사업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한일 양국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동교재 만들기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2001년 이후 발간된 공동교재는 다음과 같다. 이 공동교재 발간 이후 공동연구나 학술교류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는 2008년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 모

색을 위해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sup>8</sup> 공동연구의 목적은 정치·경제 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향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방안을 양국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었다. 2009년 2월 ‘제1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가 3개 분과위원회(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2010년 10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1년 10월 제2기 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했다. 2기 공동연구는 7개 분과위원회(인적네트워크의 확산, 지식문화미디어 교류, 원자력·에너지 협력, 복합안보질서, 경제질서, 기술협력, 환경협력)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 공동연구는 2013년 12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 3.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 설립 취지와 성과

#### (1) 설립 배경

2012년 12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2012.12.26~2020.9.16)하면서 한일은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역사 문제로 정상회담조차 열지 못하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이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 형식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sup>8</sup> 외교부 보도자료, 2013. 12.14,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 접수」, 이 글의 관련 내용은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했다.

## 포커스 I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 7월 5일 발표된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간의 인식 차이는 확인했다.

여론조사내용	한국(%)	일본(%)
(‘위안부’) 한일 합의 재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	73	23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더 사죄할 필요가 있다	91	14
미국 등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이다	80	5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로 연장하는 등 갈등이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대됐다.

한일 정부가 지원하는 양국 학자들 간 대화도 2013년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끝으로 단절됐다.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일역사가회의’이나 참여한 쟁점을 다루지는 않았다. 민간 차원에서의 공동연구도 대부분 중단되었다.

### (2) 설립 취지와 경위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은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동북아 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은 2018년 봄에 서울시립대의 정재정 교수와 성공회대의 양기호 교수에게 재단이 예산을 지원할 테니 양국의 연구자들이 한일이 직면한 역사 갈등과 화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 포커스 I

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정재정 교수와 양기호 교수가 도쿄대학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두 교수와 논의를 거듭하면서 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은 정치분과와 역사분과로 나누었고 각각 양국의 연구자가 5명씩 총 20명이 참여했다. 2018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한 이후 201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포럼을 개최했다.

김도형 전 재단 이사장은 첫 번째 포럼 인사말에서 포럼 운영의 원칙으로 아래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금까지의 여러 조직에서 ‘역사 화해’라는 말을 전면에 내건 적이 없었다. 내심으로 모두 ‘화해’를 염두에 두면서도 당연한 차이의 확인이라는 점을 같이 했다는 점에 만족하였다. 역사 화해는 대화의 과정이며, 역사 대화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역사적, 학문적 검토 속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되, 그 해석과 인식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화해’는 무작정 ‘덮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죄와 존중’이 그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이한 역사 인식의 근원은 현실정치의 소산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인 분석과 이해는 정치학적인 관점을 항상 지니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와 전망 또한 그러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별개로 활동하던 각종 위원회의 학문적인 견해를 한 자리에서 토의해 보고자 한다. 다른 학문 방법에 의해 같은 현상, 사실이 다른 말로 표현되었던 것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단어로 협의해 보자는 것이다.

셋째,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일 정부 사이에는 공적인 역사 대화의 채널이 없다. 우리 재단이 비록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이지만, 순수한 민간 차원의 역사 대화를 지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채널을 중단하지 말고 이어가자는 의미도 있다. 이 포럼이 일

## 포커스 I

종의 반관반민의 형태이지만, 정부 차원의 조직이 대개 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재단은 재정적 지원 외에는 일체의 역할을 하지 않을 작정이다. 모든 활동은 포럼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재단은 포럼을 발족하면서 일한문화교류기금 등에 일본 측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일본대사관 관계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이후 더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 결국 재단이 사무국 역할을 전담했다.

### (3) 성과와 한계

포럼은 정치분과와 역사분과로 나누어 운영했는데, 오전에는 함께 공통주제를 논의하고 오후에는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것은 기존의 포럼이나 공동연구가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만으로 구성되었던 것과는 다른 점이었다. 한일 역사 갈등의 현황과 기원, 한일의 역사 화해를 위한 노력, 조선인 전시노무동원,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전후처리, 화해학 등을 주제로 함께 토론을 했다. 하지만 한일 역사현안에 대한 논의는 정치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도 노출됐다.

역사분과는 서로의 역사 인식을 이해하고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고, 정치분과는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과회의는 참가자들이 개별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걷는 상황에서 양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한일의 역사 갈등과 화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포럼 참석자들의 한일

---

## 포커스 I

역사 갈등의 현상과 구조, 역사 화해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2년에 걸친 포럼의 성과는 2020년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대화』(정치 편, 역사 편) 두 권으로 발간되었다. 일본에서도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에 그쳤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에서 포럼에 중국 등 제3국의 연구자도 포함시키고 경제와 문화 분야로도 확장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기 포럼을 운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양국 사회와 조야에 발신하여 양국의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으나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제약도 있어 이 부분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 4. 맺음말

공동역사연구는 역사 갈등을 풀기 위한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다. 한일 사이에서도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경색시켰을 때 이것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활용되었다. 문제는 공동연구가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는 데 있다. 과거에는 공동연구를 도깨비방망이로 착각하여 과도한 기대를 한 탓에 그 성과에 실망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

한일 양국 간 공동연구는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안이하게 중립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먼저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 포커스 I

한일이 역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려면 먼저 이 연구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간다면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도 줄어들 것이다.

### **남상구(南相九, Nam, Sang-gu)**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일본 지바대학에서 일본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의 역사 인식과 한일 간 역사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의 성과와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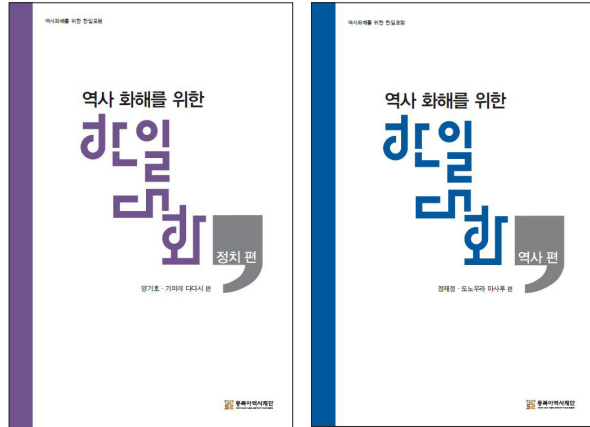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1.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의 구성과 운영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정치학 연구자 20명은 역사 화해를 주제로 내걸고, 2018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01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역사분과와 정치분과로 나누어 운영했다. 필자는 한국 측 전체 좌장과 역사분과 좌장을 겸했다. 일본 측 파트너는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 교수)와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학 교수)였다. 운영의 실무는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가 맡았다.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은 2년여의 연구·대화 끝에 2020년 12월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정치 편, 역사 편) 두 권을 간행했다.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1965) 이후 최악이라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자의 공동 노력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정치 편, 역사 편)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발의와 제언으로 발족했다. 역사 갈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나빠진 사례는 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양국은 한일협정의 틀을 지키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사 문제를 극복해왔다.

마저 거의 없는 마당에서, 포럼의 운영과 성과의 간행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재정이 정치 편, 남상구가 역사 편의 내용을 소개하고 제언을 덧붙임으로써 후속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발의와 제언으로 발족했다. 역사 갈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나빠진 사례는 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양국은 한일협정의 틀을 지키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사 문제를 극복해왔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기술이 갈등으로 치달은 후에는 정부의 외교 교섭과 더불어 민간 연구자, 교육자가 공동연구와 교류를 통해 역사

## 포커스 I

인식의 차이를 매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기술이 다시 갈등으로 불거진 후에는 정부의 외교 교섭과 더불어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나 한일신시대위원회를 운영해 보고서·제안서를 생산했다.

그런데 2011년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해진 후에는 정부의 외교 교섭도 지지부진한 데다 민간의 공동연구·교류조차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국의 사법(司法)이 역사 문제를 판결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데다, 양국 국민 사이에 불신과 혐오가 만연해 서로 자유로운 대화조차 나누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동북아역사재단은 우리에게 역사 갈등과 역사 화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볼 것을 제안했다. 재단은 지원만 할 뿐 포럼의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취지를 받아들여, 약화된 한일관계를 공동연구와 교류를 통해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충정에서 출범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0명(역사분과 5명, 정치분과 5명), 모두 20명으로 포럼을 구성하고, 2018년 봄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2년 동안 네 차례 회의를 열어 발표와 토론을 거듭했다. 화제는 한일의 갈등 구조를 정확히 구명하고 화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주로 정치분과가 전자를, 역사분과가 후자를 다뤘다. 포럼의 목적을 공유하기 위해 오전에는 두 분과가 함께 모여 공통 주제를 논의했다. 한일 간에 현안이 된 강제동원(전시 노무동원) 등이 화제로 올랐다. 각 분과 회의가 끝난 후에는 두 분과가 다시 함께 모여 논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치·역사 연구자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발표·토론을 함께 한 운영 방식은 기존의 포럼이나 공동연구와 달랐다. 덕분에 역사 연구와 정치 현실

---

## 포커스 I

에 관한 논의가 풍성해지고 이해도 깊어졌다. 역사분과는 상호 이해를 위해 어떤 사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가, 정치분과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적용하는 게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포럼의 참가자들은 양자의 합동 회의를 통해 분과의 경계를 넘어, 한일 역사 갈등의 현상과 구조, 역사 화해의 의미와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다.

## 2.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정치 편) 내용 소개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정치 편』은 3부로 구성했는데, 모두 9편의 논문을 실었다. 각 논문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정치분과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다. 다만 각 논문을 같은 분량으로 소개하지는 않고, 포럼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논문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겠다.

제1부는 ‘한일 역사 화해 가능성 모색’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2편의 논문으로 구성했다. 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 와세다대 교수)는 「한일 국제·국내 정치구조의 공진(共振)과 대화의 토대: 화해학의 관점에서」를 집필했다. 아사노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화해학’의 견지에서 한일관계 악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발전, 민주화, 글로벌화로 상징되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거의 동등한 발전 수준에서 민주사회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감정에 이르기까지 상호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현상이다.

‘화해학’ 곧 ‘분쟁해결학’이란, 역사에서 되풀이되어온 내전이나 전쟁,

그에 수반하는 인권유린이라는 사태 속에서, 분쟁 당사자 간에 분쟁 종식을 향한 합의를 낳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희생자인 당사자에게 마음의 치유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또 이와 유사한 ‘이행기정의’나 ‘과거청산론’은 피해자 구제라는 문제의식을 민주화 이전 시대로까지 확대하고, 체제 이행 과정 이전에 고통을 받은 피해자까지 구제를 호소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행기정의’는 분쟁 해결보다 정의의 구체적 실현 즉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비중을 둔다.

한국과 일본이  
대화의 출발점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 문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탈식민지화의  
최종 과제이고,  
물질세계에서  
분리된 마음 차원의  
협력 관계 정립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현대를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대화의 출발점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 문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탈식민지화의 최종 과제이고, 물질세계에서 분리된 마음 차원의 협력 관계 정립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현대를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마음이 기억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억을 지탱하는 보편적 가치나 정의를 상호 감정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가치와 일체가 되어 국민교육에도 사용되고 있는 알기 쉬운 역사와도 의식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그런 의식을 토대로 민주주의, 국민감정, 역사 기억, 인권, 주권 국가를 둘러싼 악순환 구조를 의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끈질긴 대화의 장을 구축할 필요가

## 포커스 I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고 자란 각자의 국민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회로를 함께 모색한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국민감정에 닿을 수 있는 공통된 역사적 의례나 인권을 함께 구제할 수 있는 재단 구축을 현실적 해법의 후보로서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감정이 결합하여 모델과 규범이 생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현 상황을 논하면서, 외교의 논리나 타협이 아닌 마음과 마음의 대화 과정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역사 화해를 위한 우리의 역사 대화도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다.

천자현(연세대 교수)은 「한일 화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 모색」을 집필했다. 과거의 아픈 역사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트라우마나 감정적 불협화음은 민감한 사안이다. 이것을 국가 이익이나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곧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구되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의 실행 방법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란 개인들과 기구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적 또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집약한 것을 의미한다. 많은 관련 행위자가 여러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다자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내는 형태다. 행위자 관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책결정집단, 양국의 시민사회, 피해자를 포함하는 형태다. 의사결정구조에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은 효율성에서는 부족함이 있으나, 화해정책, 화해제도 등 도출될 결과물에 대해 좀 더 많은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화해가 내재화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진실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 양국은 물

론 피해 당사자들, 공정한 제3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이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적 차원의 이행기정의와 과거 청산, 곧 ‘법을 통한 역사의 복구’ 또는 ‘법을 통한 과거사 청산’은 기존에 권위를 갖던 공식기억의 흠결을 드러내고 새로운 형태의 기억들을 공식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 공적 과정이다.

과거사 청산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비정치적 영역에서 다루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글로벌 거버넌스-글로벌 진실위원회이다. 수십 년간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시도들, 특히 국가 주도의 시도들이 한계를 보였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피해자와 공정한 3자를 포함한 글로벌 진실위원회 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제2부는 ‘한일 역사 화해와 갈등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4편의 논문을 실었다. 기미야 다다시(도쿄대 교수)는 「한일 역사 화해를 둘러싼 정치학: 역사 갈등의 억제 메커니즘과 그 기능부전」을 집필했다. 한국과 일본은 교섭이 활발해질수록, 관계가 대칭적으로 변할수록, 왜 역사 마찰이 표면화하는가? 그는 역사 갈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은 늘 존재하지만, 때

과거사 청산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비정치적 영역에서  
다루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글로벌  
거버넌스-글로벌  
진실위원회이다.

## 포커스 I

로는 수그러들기도 하고 과열되기도 한다. 왜 그런가를 푸는 게 정치학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현상이 양국 정부에 꼭 붙어있지만은 아니다. 각종 문제에 관한 국론 분열을 억제하고 단결을 호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승만정부는 반공을 위해서 반일을 억제한 게 아니라, 반공과 반일을 양립시켰다. 박정희정부는 반공을 위해서 반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그 결과 한일 국교정상화를 실현했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속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국교정상화에 수반하는 일련의 합의문에 일본의 사죄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희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 확보를 지향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보다 안보·경제를 우선했다. 곧 안보를 위해 경제 협력을 했다. 역사 인식 문제를 경제 협력을 통해 해소했다. 역사·경제·안보 3자 관계가 역사 문제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억제 메커니즘의 작동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역사보다 안보·경제를 우선한다는 점을 공유하는 정치체제 곧 권위주의체제, 일본에서 한국 사회의 합의 형성을 지원하는 관대한 태도와 한국의 발전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다. 이때는 양국 사이에 질적·양적 비대칭성이 존재했다.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하나 - 1970년대 전반기, 미중 접근과 중일 국교정상화, 베트남의 공산주의화 통일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동안의 한일관계  
둘 - 전두환정부의 한일 안보경협, 반일이 아닌 극일, 일본 나카소네와 미국 레이건 정부의 호응, 안보와 역사를 수단으로 삼아 경제 협력 획득

## 포커스 I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한 탈냉전기에 들어, 한국과 일본이 대칭기를 맞자 역사 마찰이 증대되었다. 목표의 공유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위가 확립된 마당에 반공자유주의 진영 강화라는 공통 목표는 약화되었다. 게다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양적 대칭성을 확보하자 경쟁 관계가 증대했다. 한국이 민주화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봉인된 사회적 욕구가 분출하는 질적 대칭성까지 이룩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자,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경쟁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은 기능부전에 빠졌다.

대칭 관계 아래 한일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한일 파트너십선언이었다(1998). 질적·양적 대칭 관계를 서로 상호 인식하고 존중했다. 그러나 양국은 아직 상대화·의식화의 결여로 이해득실을 따져 파트너십을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한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역사 인식 문제를 부각시켰다. 한국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도덕적 우위에 서려고 가해자·피해자논쟁을 벌였다. 일본은 속죄의식에서 한국에 관대하게 대응해온 자의식과 마찰을 빚었다. 한국에게는 배은망덕, 약속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시와 강제징용소송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등에는 보복으로 맞섰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에서도 양국의 경쟁·협력은 어긋난다. 한일은 대미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역사 마찰을 억제해왔으나, 지금은 한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득실을 합리적으로 따져 한일의 협력 가능성을 찾아내고 역사 문제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본은 한중이 긴밀해져 역사 문제에서 공동전선을 펼까 걱정하고, 중국은 일본을 우선해 한국과의 공조를 꺼린다.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에서도 한일은 차이를 드러낸다. 대북 인식과 대북 정책에 대해,

## 포커스 I

일본은 문재인정부를 불신했다. 그리하여 국제관계에서도 역사 문제 억제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기미야의 결론은 이렇다. 한일관계에서 역사는 전부가 아니다. 역사 문제의 상대화, 곧 절대화의 자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의 근대사 전부를 부정하고, 일본은 한국의 요구를 전부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역사 문제 억제 메커니즘의 기능부전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조건을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이 역사 인식을 바꿔 서로 접근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이 표면화·쟁점화·정치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억제하는 메커니즘은 한일관계에서 늘 기능해왔다. 따라서 다시 기능할 수 있다고 믿고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야 한다. 역사 문제의 대응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는 「문재인정부 한일 갈등의 기원: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외교 상이점을 중심으로」를 집필했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본격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일본의 대북 불신과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 중국 견제용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전략 등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은 한일 갈등이 상수화·장기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은 단순히 역사와 영토뿐만 아니라 상이한 외교비전과 전략적 목표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외교전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한국과 완전한 비핵화의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 완화를 반대하는 일본의 입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전제로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 포커스 I

장인성(서울대 교수)은 「화해를 향한 갈등의 긴 여정: 한일관계사에서의 협력과 갈등의 정치학」을 집필했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동력에 의해 유발된 ‘역사의 시작’은 동북아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의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이 새로운 권력 관계와 규범 형성의 ‘긴 여정’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동북아 국가 간의 갈등은 역사적이며 구조적이다. 갈등을 벗어나 화해를 향한 ‘긴 여정’은 ‘치열한 고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화해는 역사적 사실을 양해하고 역사의 기억을 공유하는 고통감각을 전제로 한다. 협력이 공간적 차원의 문제라면, 화해는 시간적 차원의 문제다. 냉전기에는 공간적 차원의 협력이 모색되었지만, 탈냉전기에는 시간적 차원의 화해 문제가 공간적 차원의 협력 문제와 교착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흔히 역사가들은 현재의 갈등 요소를 역사에서 찾고 역사적 오류를 밝힘으로써 화해의 길을 모색한다. 기억을 담은 사료의 객관적 규명(실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역사적 사실의 실증을 치유와 화해의 전제로 삼는다. ‘기억의 시간학’이라 부를 수 있다. 갈등의 역사적 연원을 찾는 실증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역사적 실증이 화해를 도출할 수 있을까. 실증은 ‘역사를 말하는’ 역사가의 관점과 선택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역사가의 현재적 관점과 이념이 역사해석(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에 짙게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실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었다고 역사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법이다. 역사적 사실이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국익)와 역사관에 의해 규정되는 한,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규명이 정치적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다.

---

## 포커스 I

역사관은 현재의 정치적, 이념적 입장에서 나온다. 역사의 실증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이해관계다. 역사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은 현재의 갈등이다. 기억은 현재의 타자와 공간적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역사 문제의 쟁점화는 한일의 변화된 권력관계의 표현이다. 여기서 ‘기억의 공간학’을 생각할 수 있다. 한일관계의 비틀림은 역사에서 비롯되지만, 비틀림을 드러내는 정치화는 현재의 권력관계에서 나온다. 갈등은 역사의 산물이지만 현재의 권력 관계에서 표출된다. 가해-피해의 역사적 사실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현재의 권력 불평등으로 인해 망각되지 않는다. 현재의 비틀림이 없다면 역사의 기억은 얼어지며 현재를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그 사회가 변모하였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사회 영역이 커졌고 진보정권은 적극적으로 국가의 양태를 바꾸고 있다. 탈냉전 이후 일본에서는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오히려 시민사회가 약화되고 국가의식을 높이는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으로 사회변동을 겪는 한편, 권위주의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중국의 개혁개방, 일본의 보수화는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구축해왔다.

갈등과 협력의 긴 여정에는 동북아의 특수한 주권국가체제에서 행동하는 강한 국가들이 관여한다. 확장된 공간관념(아시아관)을 통해 동북아 공간과 한일관계를 상대화하는 한편, 강한 국가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가-사회 관계는 동북아 주권국가체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일 수 있다. 사회가 국가의 규율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속성을 바꿀 수 있을 때, 변증법적 과정의 여정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일관계 혹은 동북아 국제관계의 미래상은 국내 체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사회 관계의 재편은 국민국가와 내셔널리즘이 유연해지는 과정이며, 주체적 화해를 지향하는 ‘기나긴 고투’의 여정이다. 유럽 국가들은 세력균형의 경쟁체제인 평화체제와 협력의 다자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유럽의 지정학적 조건과 정치체제의 유사성에서 가능했다. 칸트가 영구평화의 전제로 민주정을 내세운 것은 국가-사회 관계의 양태가 국제 갈등을 해소하는 핵심적 전제조건임을 말해준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는 「왜 화해는 요원한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의 한일관계」를 집필했다. 역사 갈등을 안고 있는 한일은 국교정상화 후에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통 이익을 도출해내고 외교로 극복해왔다. 그 결과, 연간 왕래 1천만 명을 넘어서는 관계를 구축해왔다. 지금 잇달아 대립이 첨예화하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상의 지도력과 외교뿐이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역사 화해, 대북 정책,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모든 영역에서 정체 또는 후퇴라 표현할 만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등장했다. 그렇다고 20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일은 지금까지 변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밖에 없다. 현 상황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나긴 고통의 과도기이며 더 한층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성장통’이다.

2020년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와 사회 동향에서 역사 문제가 현 정부의 현안 관리나 외교를 제약한다. 대북 정책에서 한국 정부는 대화와 관여를, 일본 정부는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둔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중국의 대두에 대해서도 한일은 다르게 대응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역

사 문제의 재연으로 상호 불신이 높아졌다. 한국에서는 1965년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사법기관의 원론적 판결,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난이, 일본에서는 역사 문제에 기울여온 노력을 한국이 무시하는 데 대한 반감과 피로감이 쌓였다.

결론으로서 다음을 제안한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 사회의 변화에 눈을 돌려라. 리더십에만 주목하지 말고 구조적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라. 상대국의 전략이나 인식을 이해하라. 공통분모를 모색하고 늘려가라. 과거 20년의 변화를 전제로, 위기 ‘관리’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

제3부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역사 화해’라는 제목 아래 3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은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과 한일 역사 갈등: 한미일 관계에서 본 동맹과 과거사 문제」를 집필했다.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은 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 변화와 밀접히 연동되어 전개되었다. 한일관계가 냉전기의 ‘특수관계’에서 탈냉전기 이후 ‘보통의 국가 간 관계’로 이행하면서 과거사 문제가 분출하였고, 대일 외교에서 역사와 안보·경제 문제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2010년대 들어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가시화하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자 관계의 현안을 넘어 미국·중국이 가세한 전략게임과 연동

2020년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와 사회 동향에서 역사 문제가 현 정부의 현안 관리나 외교를 제약한다.

...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 문제의 재연으로 상호 불신이 높아졌다.

## 포커스 I

되고 있다. 미국은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나아가 동맹 내 균열이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지난 50년의 한일관계(1965년체제)가 식민지배의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수직적 특수 관계의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50년의 한일관계는 수평적인 보통의 국가관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일이 상대방의 전략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협력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자유무역체제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 일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세의 불투명이 증가할 때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다. 북핵 문제, 국제 경제의 불투명성, 한중관계의 냉각, 미중 전략경쟁의 가속화 등 최근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어느 때보다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추규호(주교황청 대사)는 「역사 갈등을 넘어서는 21세기 정치·외교의 길」을 집필했다. 한일관계에서 갈등은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갈등의 내용에 따라 관리해나가는 게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에 양국 정부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징용피해자 판결로 야기된 문제는 단기 과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기금 조성,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입법 조치) 등이 방법이다.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가 있다. 유골 봉환, 문화재 반환 등이다. 국제 질서 전환에 대비한 한일의 상호 협력이 절실하다.

가와시마 신(川島眞, 도쿄대 교수)은 「‘화해’의 관점에서 본 전후 중일(中日)·일대(日臺) 관계사: 한일관계사와의 비교 시점」을 집필했다. ‘화해’는 전쟁이나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 행위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행한 행위에 대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대전제로, 피해자 측이 관용적

‘화해’는 전쟁이나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 행위다. ... ‘화해’가 진행되려면 국내 정치 사회, 국제 정치 사회가 그러한 과정을 진행할 만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

태도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립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게 중요하다. ‘화해’가 진행 되려면 국내 정치 사회, 국제 정치 사회가 그러한 과정을 진행할 만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

‘화해’라는 개념을 알고 프로세스로서 의식하는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중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들어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조인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은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이 더 중요하다. 일본과 중국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한국은 카이로선언이 중국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1980년대 중국에서는 대일관계에서 역사와 경제가 두 축을 이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지원은 시기상으로 다소 앞서는데, 한일 간 역사 문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중일, 한일 관계를 비교할 때 중요한 요소다. 같은 해 장쩌민(江澤民)의 방일 중 중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일본 대중은 전자를 높이 평가한 반면, 후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2006년 중일역사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양국 사이에 역사를 둘러싼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일은 2002~2009년에 2차에 걸쳐 한일역사공동연구를 진행했는데, 어떤 평가를 받는가. 상호 비교가 필요하다.

일본-중화민국 간에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덕보원(以德報怨)’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장제스(蔣介石)의 이 말은 일본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역사 문제를 봉인하는 억제장치로 기능했다. 이런 개념이 한일 간에도 존재하는가.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에서 채용된 이행기정의가 2016년 타이완 차이잉원(蔡英文)정부가 등장하자 역사 문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중시하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나 민주화가 실현되었을 때, 전 정권의 행위를 재검증하고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의 균열이나 부조리를 없애는 작업이 이행기정의다. 이 관점에서 비교하면, 한국은 국민당의 주장에 가깝고, 민진당과는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한국이 타이완과 같이 반공국가·분단국가였다는 사실이 일본과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 북한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달리 일본과 관계 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중국에서 볼 때, 역사 문제는 단순한 대일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중국 간의 정당성을 둘러싼 경쟁 관계, 국내정치 문제였다.

중국에서 볼 때, 역사 문제는 단순한 대일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중국 간의 정당성을 둘러싼 경쟁 관계, 국내정치 문제였다. 한국은 어땠나. 일본과 ‘이덕보원’이나 ‘중일우호’에 비견되는 말이 있는가. 1950~1970년대 일본 국내에서 전쟁 책임이나 식민지 통치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때,

---

## 포커스 I

한일의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교류가 있었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와 독도 문제를 비교할 때, 역사 문제에 미친 영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에서의 인식은 어떤가. 이상 여러 상황을 한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각각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일은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를 모색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 3.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에의 제언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포럼’은 민간 레벨의 역사 대화가 거의 두절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역사 대화였다. 게다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두 권의 책을 간행하는 성과를 올렸다. 참가자들의 성의와 노력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진지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포럼을 주재한 필자로서 소감과 제언을 몇 마디 피력함으로써 소임을 다하겠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 역사 갈등에서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사 문제를 관리해온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나름의 성취도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역사가는 공동연구와 공동교재 개발을 시도했으며, 인적·물적 교류도 활발히 전개했다. 따라서 한일이 함께 이룩한 성취의 역사를 정리·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수정하고 보완한 위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인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화해를 목표로 삼거나 거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일단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

는 데 목표를 두자. 필자와 같은 연구자는 공동 연구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기억 공유 등을 모색한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매스컴, 교육, 여행, 출판, 영화 등을 통해 일반에게 널리 보급한다. 가치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 더욱 좋겠다.

실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국익과 역사 문제를 저울에 달아보고, 어느 게 서로에게 더 중요한가를 따져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국제관계, 역사 문제, 안보 역량, 경제 상황, 보편 가치, 미래 창조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국내외 현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악하는 능력, 한일관계와 국제관계의 내력을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역사교육 등을 통해 길러야 할 소양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한일 간 역사 문제에서 불거질 만한 사안은 다 나왔다. 해결 방안도 이런저런 수단을 다 써봤다. 이제 그 내력을 모두 점검한 위에서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출하면 좋겠다. 곧, 역사 문제의 범주와 유형, 극복을 위한 수단과 방법 등을 종래의 역사 대화에서 찾아내 장단점을 비교·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실사구시의 접근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역사 대화를 다시 시작해 계속할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인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화해를 목표로  
삼거나 거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일단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자.

---

## 포커스 I

수밖에 없다. 최소한 10년 이상 수십 차례의 역사 대화가 필요하다. 동북 아역사재단이 모체가 되면 좋겠다.

역사 갈등을 단칼에 해결하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상호 불신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역사 대화 참가자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서로 체면을 세워주는 여유와 아량을 가지고 역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삼아 역사 화해 프로세스를 추진하면 좋겠다. 역사 대화를 그 과정의 하나로 설정하고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 정재정(鄭在貞, Chung, Jae-jeong)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근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철도사와 한일관계사를 연구하고, 한일의 역사 대화에 적극 참여했다. 요즘에는 한일의 근대 교통과 역사 인식 문제를 집필하고 있다.

# 한중 ‘갈등·협력·경쟁’ 관계 학술교류의 의의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의 현장을 보노라면, 세계 어디에서나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화해’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 서구사회의 이 전쟁은 NATO를 둘러싼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체제 대립이었던 냉전(Cold War)의 기억을 소환한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러시아를 지향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 부상과 ‘신냉전시대’의 서막이 아닌가 걱정케 한다. 동아시아 역내도 마찬가지다. 역내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 한반도,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역사·영토 갈등으로 민족주의는 고조되고,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격화는 ‘신냉전’으로 묘사되곤 한다.

‘신냉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이 문제의 근원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에 기름을 붓기는 했지만 정작 불을 붙인 것은 중국이다. 2008년 대침체 이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감돌고 미국의 쇠퇴를 점치는 시각이 확산되자, 중국의 지도자들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온건정책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폐기하고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부터 호주 경제 압박과 홍콩에 대한 약속[홍콩기본법으로 1997년 이후 50년간 홍콩인에 의한 통치(港人治港)와 일국양제(一國兩制) 보장] 파기에 이르기까지 공세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sup>1</sup>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기, 중국의 강대국화 공세가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근현대 한중 관계는 청일전쟁(1894~1895) 이후 단절되었다. 이후 중국은 한국전쟁(1950~1953)에 인민지원군을 파견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도우며 한반도 문제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면서 현대 한중 관계가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남한과, 구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북한 간의 체제 대결이었고, 민족내전의 성격을 뛰어넘어 미·소·중 대리전의 성격이 강했던 전쟁이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에 참가하였으며 이후에는 북한과 동맹관계로 상징되는 ‘우호협력

<sup>1</sup> 조셉 나이(Joseph Nye), 2022, “중국의 도전과 역사의 교훈”, 『Trans-Pacific Dialogue 2021 결과보고서』, pp. 28~29, 최중현학술원.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을 학습한 한국인은 근래 중국(네티즌)에 의한 소위 '김치공정', '한복공정' 뉴스를 접하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 중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상호원조조약(1961)'을 체결하였다.

'2020 한국인 정체성 조사'(『중앙일보』 2020.7.6)에 의하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인식이 드러난다.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대하여 '북한 정부'라는 답변은 7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라는 답변은 2005년 8.5%, 2010년 23.1%, 2015년 19.6%, 2020년 33.4%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 사이에 일고 있는 '반정서' 기류도 예사롭지 않다.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학습한 한국인은 근래 중국(네티즌)에 의한 소위 '김치공정', '한복공정' 뉴스를 접하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 중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최근 중국 내 오미크론 코로나가 확산되자 그 원인의 하나로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순식간에 중국 네티즌에 의해 인터넷에서 달구어졌다.

중국인터넷정보중심(CNNIC)이 2022년 3월 공개한 「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2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10억 3,200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73%에 이른다. 흥미로운 것은 그중 메신저 사용자는 97.5%, 인터넷 동영상은 94.5%, 짧은 동영상은 90.5%

에 이르고, 그 규모는 각각 10억 700만 명, 9억 7,500만 명, 9억 3,400만 명이라고 한다.<sup>2</sup> 혹자는 중국의 이와 같은 메신저 사용자 수를 두고 ‘대중 마이크 시대’라고 부른다. 중국 네티즌의 대부분은 Y~Z세대<sup>3</sup>이다. 이들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래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한 세대이고 톈안먼 사건(1989)을 계기로 학교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며, 공산당과 국가에 대한 애당심과 애국심으로 무장된 인구층으로 (북한보다는) 한국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2005년 한국의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한국을 ‘문화도둑’으로 비꼬며 ‘문화원조’ 논쟁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중국 내 ‘험한’의 불씨는 어제 오늘 일고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톈안먼사건 후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의 역사와 운명을 가르침으로써 애국가 세대를 만드는 일에 착수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였고, ‘애국주의’는 현재 중국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장쩌민 주석의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받들면서 그 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國夢)’이라는 새로운 민족주의 사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셉 나이(Joseph S. Nye)는 이에 빗대어 현재 미중 갈등의 원인으로 사회주의

2 CNNIC发布第49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2022.3.4)》([https://www.edu.cn/xxh/ji\\_shu\\_ju\\_le\\_bu/Internet/202203/t20220304\\_2213218.shtml](https://www.edu.cn/xxh/ji_shu_ju_le_bu/Internet/202203/t20220304_2213218.shtml), 검색일 2022.4.2).

3 한국에선 대체로 1965~1979년까지 출생자를 X세대, 1980~2000년까지 출생자를 Y세대, 그리고 Y세대와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1995년 이후 태어난 젊은이를 Z세대라고 지칭한다.

와 자본주의보다는 민족주의를 거론하며, 이에 적합한 역사적 비유로 1945년이 아닌 1914년을 들고 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유럽에서 요동친 민족주의 때문이었고, 민족주의는 노동계급의 결속에 있어서 사회주의보다 강했고, 금융가들을 한데 묶는 힘도 자본주의보다 강했다고 한다.<sup>4</sup>

시진핑 주석은 신중국 건국 100년(2049)까지 ‘중국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다. 시진핑 정부의 대(對)한반도 인식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확연히 다르다. 예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들었다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언론기사,<sup>5</sup> 그리고 근래 중국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 <장진호(長津湖)>와 베이징에서 거행된 항미원조 7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역사의 정치화’ 행사에 비추어 보면, 향후 한중 관계는 역사와 지정학적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4 조셉 나이, 2022, 앞의 글, pp. 29~30.

5 「WSJ Trump Interview Excerpts: China, North Korea, Ex-Im Bank, Obamacare, Bannon, More」, 2017.4.13(<https://www.wsj.com/articles/BL-WB-68027>, 검색일 2019. 6.10).

## 2. 한중 학술 교류 채널과 의의

### (1)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동북지역 사회과학원

‘동북공정(2002~2007)’은 중국의 부상(中國崛

起)과 그에 따른 ‘다민족통일국가’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국 중심의 역사 인식 프로젝트다. 2003년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홈페이지에 의하면, 중국은 동북 3성(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동북지역의 분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일부 국가가 동북변강<sup>6</sup>지역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부 정치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걱정하여, 동북변강지역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이 연합하여 ‘동북공정’의 대형 프로젝트를 2002년 2월에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는 고대중국의 강역이론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족사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연구, 중북관계사연구, 중국동북변강과 러시아극동지역의 정치·경제관계사연구, 동북변강사회의 안보전략연구, 한반도 정세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동북변강안보에 대한 영향 연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강안정”이라고 적었다.<sup>7</sup>

6 변강(邊疆)은 한국어로 변경, 변방, 국경을 의미한다.

7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 참조(<http://bjzx.cass.cn/news/129976.htm>, 검색일 2012.8.30, 2015.9.8).

중국의 동북 3성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국제관계의 요충지이고, 한반도 고대사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지리적 근거지이다. 중국은

## 포커스 I

여기에는 역사와 정치 그리고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국제관계가 유기적, 중층적으로 얽혀 있기에, 한국으로선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을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나아가야 한다.

‘동북진흥전략’의 일환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의 동해안(나선-청진)을 교두보로 하여 태평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90%를 능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의 일부 언론은 이러한 실정에 빗대어 북한이 ‘동북 4성’으로 중국 대륙에 예측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밝힌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북공정을 한반도 고대사 왜곡의 역사공정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여기에는 역사와 정치 그리고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국제관계가 유기적, 중층적으로 얽혀 있기에, 한국으로선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을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 동북지역 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 채널을 활성화 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의 역사 인식을 바로 잡고, 나아가 상호 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했다.

8 동북아역사재단은 2009년 4월 지린성사회과학원과, 같은 해 10월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9년 중국 지린성사회과학원[원장 빙정(郟正)], 그리고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원장 취웨이(曲伟)]과 각각 기관장 상호 방문을 통한 학술교류를 추진하여 양해각서(MOU)를



지린성사회과학원을 방문한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오른쪽)(2009.7)

체결한 바 있다.<sup>8</sup> MOU의 주요 내용은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공동학술회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상호 간 연구자 파견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은 연구자를 파견하는 등 학술교류 채널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2010.3)’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실시된 한미 연합 해상군사훈련에 대하여 당시(2010.7)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중 갈등으로 전이되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동북아역사재단과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이 각각 체결한 MOU는 중국의 일방적 중단 요청에 의해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제6회 NAHF-SASS 학술회의(2018.3,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회의실)

## (2) 동북아역사재단(NAHF)과 중국상하이사회과학원 (SASS)<sup>9</sup>

2013년 한중 (박근혜-시진핑) 정상회담의 결과, 양국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인문교류(人文紐帶)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 정부의 동북아 전략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한중 인문학술교류’ 차원에서의 역사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상하이사회과학원을 구심점으로 학술교류를 추진해 왔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수도이자 최대 인구도시로서 많은 한국 기업과 교민이 거주하고 있어 중국인의 대한국 인식 개선을 위해

<sup>9</sup> 1958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사회과학원이다. 상하이의 유일한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철학·사회과학 분야에서 국제 학술교류의 중점 역할을 맡고 있다. 원내 주요 연구소로는,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 세계중국학연구소 등 17개의 연구소와 12개의 연구센터가 있다.

## 포커스 I

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동북아역사재단-상하이사회과학원 학술교류는 동북아역사재단 한중 관계연구소,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와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다. 학술교류의 방식은 매년 1회, 상호 관심사를 주제로 설정하여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주최하고, 회의 경비는 윤번으로 초청자 측에서 대부분 부담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논의한 회의 주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회차	날짜	장소	주제
제1회	2013.11	서울	한중 공공외교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2회	2014.6	상하이	일본의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신질서
제3회	2015.11	서울	전후 70년: 동북아 국제질서와 미래 전망
제4회	2016.10	상하이	한중 협력: 도전과 대책
제5회	2017.11	서울	근·현대, 동북아 국제질서 비교 분석과 한반도 시사점
제6회	2018.10	상하이	항구적 평화 구축: 현 동북아 경제와 한중 협력

회의 내용은 한중 사이에 점증하는 갈등 요인을 어떻게 차단하고, 협력 요인은 또 어떻게 배가시킬 것인가,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 문제(핵과 미사일), 역내 역사·영토 갈등에 따른 배타적 민족주의 고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근방식이 유용한가에 맞춰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 발표문을 매회 자료집으로 엮은 다음, 그중에서 동북아 역사와 현실에 대한 19편의 글을 선별하고 보완하여 『부상하는 중국과 동아시아』(2020)를 발간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부상하는 중국과 한반도’, 제2부는 ‘한반도를

## 포커스 I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제3부는 ‘동아시아 역내 갈등과 협력’을 다루었다. 특히 제3부에서 다룬 동북아 역내 화해와 협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한일(1965), 중일(1972), 한중(1992) 사이 국교정상화의 절차적 화해를 지나, 경제협력·배상·보상의 물질적 화해를 넘어, 세 번째 단계의 관념적 화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재조명하였다.

요컨대, 유럽지역에서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 화해를 이끌어낸 것은 프랑스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톨레랑스(tolerance)의 덕목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동북아 역내에는 톨레랑스보다 더 관용적인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덕목이 있어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건은 각국이 자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역사 민족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 (3) 한중역사포럼

한중 수교(1992.8.24)는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양국은 수교 전 적성(敵性) 국가에서 수교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선린우호와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그리고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수교 이래 20년 동안의 양국 관계는 역사와 통상 분야에서 국지적 갈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호·협력’이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문제는 수교 20년 이후(2012~현재)였다. 한중 사이 기존의 갈등 요인이 ‘민족주의’ 기류에 편승하여 확대되고, 그에 따른 상호 간 반한(反韓)과 혐중(嫌中) 정서도 확산되어 관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중 관계에서 반목과 질시가 횡행하는 현상은 마치 중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20년(1972~1992) 이후 20년(1992~2012) 동안 체험한 관계 악화(政冷經熱→政冷經冷) 현상과 흡사하다. 중일 관계 악화의 근원은 역사·영토를 둘러싼 ‘민족주의’ 고조 때문이다. 예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집권 기간 내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 한일, 중일 사이의 역사 갈등을 정치화하여 ‘민족주의’ 점화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그 후 중일 역사 갈등에서 불붙은 민족주의 불씨는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영토 갈등으로 비화하였고, 이로 인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제안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수면 아래로, 대신 ‘민족주의’ 기류가 전 분야에서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한중 관계에서 반목과 질시가 횡행하는 현상은 마치 중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20년(1972~1992) 이후 20년(1992~2012) 동안 체험한 관계 악화(政冷經熱→政冷經冷) 현상과 흡사하다.

지금의 한중 갈등 관계는 과거 중일 관계를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한중 수교 20년이 지나면서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3차 핵실험(2013.2), 4차 핵실험(2016.1), 5차 핵실험(2016.9)]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부각되었다. 한미 동맹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였고, 이로 인해 남북, 북미 관계는 뒤틀리고, 미중 갈등은 고조되고, 동북아 정세는 마치 살얼음판

을 걷는 형국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 동북아 주요 국가 간 북한 문제(핵, 미사일) 출구를 모색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내 역사 갈등의 근원인 ‘민족주의’와 정치 갈등의 근원인 ‘북한 문제’에 대하여 ‘역사와 정치’ 융합토론 방식의 ‘한중역사포럼’을 양국 학계에 제안하였다. 양국 학계는 재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재단은 그해 8월 양국 전문가 24명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 이후 2년간 지원했다.

한중역사포럼은 역사학과 국제정치학을 융합하여 하나의 회의체로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분과[분과장: 전인갑, 왕위안저우(王元周)]는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를 주제로 정하였고, 국제관계분과[분과장: 이희옥, 리청르(李成日)]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관계의 모색-역사로부터의 경험’을 주제로 설정했다. 회의 내용에서도 역사와 정치의 유기적 융합을 기했다. 역사분과에서 다룬 ‘민족주의’를 국제관계 분과에서 다룬 북한 문제와 미중 관계의 국제정치에 접목하여, 포럼의 주제 ‘역사인식의 공유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중 관계’로 엮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포럼의 결과인 24편의

한중역사포럼은  
역사학과  
국제정치학을  
융합하여 하나의  
회의체로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 포커스 I



2019년 11월 제4차 한중역사포럼(서울)에 참석한 전체 위원과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가운데)

글을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역사분과)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관계의 모색-역사로부터의 경험』(국제관계분과) 두 권으로 묶어 한국어(2020), 중국어(2021)로 각각 발간했다.

### 3. 맺음말

조셉 나이에 의하면, 중국을 적대시하는 냉전 논리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내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여 세력 확보에는 유용하지만 대외 전략으로 사용할 경우 역효과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을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둔 국가가 더 많고, 이들은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지배)에 대해 미국의 안전보장을 바라지만, 냉전시대 동맹국들이 소련과 그랬던 것처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축소할 의향이 없다고

특히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에  
관한 학술교류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역사의  
정치화’를 경계하여  
‘역사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실질적인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상시적이고 실용적인  
학술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조셉 나이, 2022, “중국의 도전과 역사의 교훈”, 『Trans-Pacific Dialogue 2021 결과보고서』, pp. 28~29, 최종현학술원.

한다. 그는 또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관해서는 화웨이(華為技術, Huawei) 사례와 같이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탈동조화는 유용하지만, 경제를 포함한 전면적 탈동조화는 비싼 대가만 치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게다가 생태적 상호 의존성을 지닌 기후변화와 팬데믹(pandemic)은 물리와 생물 법칙으로 인해 탈동조화가 불가능하다며, 그 어떤 국가도 이러한 초국가적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한다.<sup>10</sup> 나이의 주장은 현재의 한중 양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 체제하에서 ‘갈등·협력’ 요인을 함께 안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띠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계 구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아닌 상호 관련 분야의 학술교류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비록 규모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지만, 양국 사이의 갈등과 협력 요인을 자국 중심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에 관한 학술교류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역사의 정치화’를 경계하여 ‘역사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실질적인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상시적이고 실용적인 학술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수교 당

## 포커스 I

시와 비교하면 양국의 체급은 분명히 달라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2010년은 중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해였다. 중국은 당시 고도 경제성장기로 일본을 제치고 G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경제대국(G7)을 향해 약진하고 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양국의 갈등과 협력 요인은 물론 상호 관심사도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이들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과 요구가 아니라 상호 간 타협과 협력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차재복(車在福, Cha, Jae-bok)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연구소에서 동북아국제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정치외교사와 세계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근래에는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신중화주의와 한중 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한중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의 뿌리와 과제

##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전인갑 서강대 교수



### 1. 한중역사포럼 역사분과의 주제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으로 2018년 역사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한중 역사 인식 공유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한중역사포럼을 조직하였다. 포럼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과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내용을 소개하는 『한중 역사 인식의 공유-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2020, 동북아역사재단)는 한중역사포럼 역사분과의 결과물이다. 한중역사포럼 역사분과는 한국 측 서강대학교 사학과 전인갑 교수와 중국 측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왕위안저우(王元周) 교수가 공동으로 발기하였다. 이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6명

\* 이 글은 『한중 역사 인식의 공유-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전인갑·왕위안저우 편, 2020, 동북아역사재단)의 「책머리에」를 수정·보완했으며, 왕위안저우 교수와 협의하여 작성했다.

의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위원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역사분과의 주제는 ‘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역사문제’로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그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역사 인식 문제는 한중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SNS 등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역사 인식 문제는 쉽게 대중화하여 양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갈등을 증폭시켜 급기야는 양국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중역사포럼 역사분과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 인식 문제가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과 국가주의적 성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민족주의가 양국의 역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 2. 전쟁 기억과 상호 인식

근대 이후의 전쟁 경험과 역사상의 전쟁에 대한 기억은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중 양국의 역사 인식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민족주의의 형성은 국가 간의 경쟁, 특히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대 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청일전쟁,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 한국전쟁 등 여러 차례의 큰 전쟁이 발발했다. 이들 전쟁은 동북아시아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역사상의 전쟁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켰다. 근대 이후의 전

## 포커스 I

쟁 경험과 역사상의 전쟁에 대한 기억은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중 양국의 역사 인식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천상성(陈尚胜) 교수는 역사상의 전쟁에 대한 한중 양국의 역사 인식을 분석하였다. 천상성 교수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전근대 동아시아는 중화질서하에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민족 정서는 본래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말·청초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은 각국의 민족 정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고, 이에 대응하여 명나라는 조선에 파병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여진족이 흥기하여 명나라와 대립했으며 두 차례나 조선을 침략했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중원을 장악하고, 명의 잔존 세력인 남명 정권을 소멸시켰다. 명말·청초에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전쟁과 대격변으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민족대립과 민족의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조선과 일본 양국은 이때부터 문화적으로나 의식적으로 ‘탈중국화’하기 시작했다. 천 교수는 청나라와 명나라의 전쟁 그리고 청과 남명 세력과의 전쟁, 후금(청)과 조선의 전쟁을 중심으로 당시의 남명, 조선과 일본 사대부의 대청 인식과 전쟁 기억을 분석했고, 이들 세 국가의 사대부가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전쟁과 변국(變局)을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천 교수는 대청 인식과 전쟁 기억이 이들 세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변화시켰음을 규명하였다. 천상성 교수는 문화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명청 교체 이후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체계와 화이지변(華夷之辨: 중국과 오랑캐 간의 구별)의 부정합(不整合)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에서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근대민족주의의 내재적 원류가 형성되어 동아시아 각국 간의 상호 인식과 상호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명기 교수는 조선이 1637년 성하지맹(城下之盟)을 통해 청에 굴복한 이후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조선의 대일 인식과 대청 인식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였음을 분석하였다. 한 교수는 명청 교체 외에도 원명 교체,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는 조선인의 대외 인식은 지정학적 위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조선의 대중 인식과 대일 인식이 상호 연동되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사대교린이라는 외교 전략-대명·대청과는 사대(事大) 관계, 대일과는 교린(交隣) 관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교수도 지적했듯이 조선의 사대교린체제는 불안정하여 동아시아 정국의 안정과 힘의 세력균형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었다.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에서 큰 혼란이 발생한다면 조선의 사대교린체제는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조선 내부의 위기를 촉발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대외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었다.

한 교수는 현대 한국인의 대중·대일 인식이 조선시대의 그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매우 많다고 보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김성보 교수도 한 교수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김 교수는 한국인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화이지변이라는 관념으로 한국전쟁 중 중국 지원군의 참전 행위를 이해하는데 익숙하고, 타이완으로 후퇴한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으로, 신흥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오랑캐(胡虜)’로 여기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랑캐(호로)’”라는 인식은 병자호란과 관계된 역사 기억을 소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북한도 이 점에서는 같은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중국 지원군의 참전을 역사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임진

왜란 시기 명나라의 조선 원조 전쟁 참전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또한 김성보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의 남북분단, 중국의 국공내전과 양안의 오랜 분단, 한때의 베트남 남북분단을 비교 분석하여 분단의 상호 연동성을 총괄하고, ‘동아시아 분단의 연쇄’라는 관점으로 역사 인식과 상호 인식의 연동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북한, 중국이 과거에 역사 인식상에서 포용성이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한중 양국의 역사에서 좌우 합작, 국공합작 등의 경험이 존재했고, 그러한 경험에 대한 역사 기억은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김 교수는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한반도의 남북분단 문제와 중국의 양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이 비로소 열린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큰 틀에서 볼 때,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많은 문제의 근원은 일본제국주의의 대외 침략에 있다.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 한일 간의 독도 문제 등은 모두 근대 일본의 대외 확장과 관련이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많은 문제의 근원은 일본제국주의의 대외 침략에 있다.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분쟁, 한일 간의 독도 문제 등은 모두 근대 일본의 대외 확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역사 현안이기도 한 중국과 한반도 국경선 문제는 매우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중국

## 포커스 I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리화쯔(李花子) 연구위원은 종번(宗藩) 관계하 중국과 조선의 국경 의식 및 국경 업무의 처리방식을 연구하였다. 한반도 북부는 원래 여진족이 살았던 지역이었으나 고려와 조선이 여러 차례 북진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점차 그 통치 범위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후금(청)이 부상함에 따라 여진족이 싱징(興京)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조선은 북방 접경지대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으며, 청과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양국의 경계로 삼기로 공인하였다.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의 백두산(창바이산) 지역의 국경 획정에 대해 리화쯔 연구위원은 목극등(穆克登)이 국경을 조사한 후 설정한 국경선이 가진 중요성과 성격을 강조한다. 또한 리 연구위원은 정계(定界) 과정에서 조선이 더 많은 땅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리화쯔 연구위원은 국경이 백두산 남벽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나라 측의 강한 백두산 귀속 의식을 강하게 자극하여 광서 연간에 국경 분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조공책봉체제는 의례상에서 일종의 위계질서이지만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존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해 리 연구위원은 영토 문제와 같은 중요 문제에서 청이 일방적으로 조선을 압박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고, 때에 따라서는 조선에 더 유리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조공책봉체제를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3. 국가 정체성과 동아시아 정체성

학계는 통상적으로 국민국가(민족국가) 건설 과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려 한다. 한중역사포럼 역사분과에서 민족주의를 주제로 선정한 것은 이 주제가 한중 양국의 국민국가 건설의 이 동(異同)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양국 간 역사 갈등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전인갑 교수도 이런 시각에서 출발하여 근대 이후 중국은 민족주의라는 패러다임하에서 국민국가(민족국가)의 건설에 매진했으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이 패러다임이 퇴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민족주의 패러다임이 문명대국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근현대 200여 년 동안 중국은 두 차례의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했음을 강조하였다. 전통시대 보편제국/문명제국 패러다임이 민족주의/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 한 차례이고, 민족주의/국민국가 패러다임이 또다시 보편대국/문명대국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이 또 한 차례다. 전인갑 교수는 이 글에서 중국이 생산하려는 보편가치와 보편문명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중국을 동아시아의 질서나 동아시아 문명과 동일시한다는 비판이나 중국의 보편주의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 근대 민족주의는 서양에서 시작되었지만, 서양 여러 나라에서도 민족주의의 성격과 전개 양상에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로 전파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정치, 문화 전통과 결합하고, 각국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변형되어, 각국의 민족주의는 내용과 형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물론 유사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중국에서 근대 민족주의가 전파되는 데에는 량치차오(梁啓超)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김승욱 교수는 량치차오의 근대 민족주의 수용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민족주의가 독일 블룬칠리(Johann Caspar Bluntschli) 학설의 영향을 받았으며, 블룬칠리 학설은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형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량치차오는 일찍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중시했다. 그 영향으로 그는 근대국가에서는 군주주권이 국민주권으로 이행했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경향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후 량치차오는 블룬칠리의 ‘국가 학설’에 경도되었는데, 김승욱 교수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량치차오는 청조의 통치 범위 내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大)민족공동체를 만들어 통일적 국민국가(민족국가)를 건설하려 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집단주의, 권위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다. 말하자면 량치차오가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민족주의로 전향한 것이다.

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에서 ‘국사 만들기’는 중요한 과업이었다. 김승욱 교수는 량치차오 민족주의의 특징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량치차오의 신사학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사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는 량치차오의 신사학이 신해혁명을 전후해 한 차례의 중대한 전환이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신해혁명 전에는 진화론의 영향으로 역사학을 과학으로 보고 인과 분석을 중시했지만, 신해혁명 이후에는 역사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를 인식하고 더 이상 인과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대신에 의지력(心力)을 강조하였다. 김승욱 교수는 이러한 변화는 그의 민족 인식에 있어서 민족의 정신, 의지를 한층 더 강조하고, 과학적으로 중화민족

## 포커스 I

의 ‘통합성’을 논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런 량치차오의 변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아직 양국 학자들의 견해차가 크다.

정지호 교수는 량치차오의 국성론(國性論)을 근간으로 하는 신질서 모색에 주목하였다. 정지호 교수는 량치차오가 신해혁명 후의 정치 상황을 겪으면서 민족(국가)주의 대신 국성을 강조하였다고 지적한다. 량치차오가 말하는 국성은 민족성이다. 그는 국성이야말로 민족(국가)의 존망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확신했다. 량치차오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성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쉽게 열강에 의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불망론(中國不亡論)’을 제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성을 개량하여 국민통합을 강화하고 안정된 신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량치차오가 말한 ‘국성’의 핵심 내용은 보은, 명분, 미래에 대한 고민(慮後)인데, 이는 유가 도덕의 주요 내용으로 그가 공자를 국성의 상징으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은 신문화운동의 확산에 따라 신지식인들은 반전통 성향이 강했던 만큼 량치차오의 국성론이 그 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층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승욱 교수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해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한다. 근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국성’, ‘국혼’, ‘민족성’, 민족성 개량 등에 관한 논의가 분분한데, 이러한 논의를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지호 교수의 연구에서 량치차오의 ‘국성’론에 세계주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국주의적 시각에서 그의 국성론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 교수는 량치차오는 인류는 민족주의-

## 포커스 I

민족제국주의(民族帝國主義) 시대에서 만국대동주의(萬國大同主義) 시대로 전진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그의 최종적 목표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왕위안저우 교수도 량치차오가 일찌감치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가족 관념과 천하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가족 관념과 천하 관념의 영향은 줄곧 존재했으며, 국가 관념은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왕위안저우 교수는 전통적인 천하 관념이 새로운 관념과 결합하여 동양주의(東洋主義), 아시아주의와 같은 지역주의 그리고 세계주의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량치차오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동북아시아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생겨난 것은 근대 동아시아인이 전통 유가의 “가국천하연속체(家國天下連續體)”를 타파한 이후에, 그리고 새로운 가국천하연속체를 건설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천하 사이에 지역 정체성이 보태졌기 때문이다.

## 4. 정의와 역사적 책임

20세기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침략으로 지역 정체성과 세계 정체성이 보편적으로 확립되고 공고해지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모색된 지역 정체성과 세계 정체성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혹은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오늘날의 실험에 사상적 자원은 될 것이다. 그러나 제국과 제국주의, 식민 통치, 영토 문제와 역사 현안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쑹청유(宋成有) 교수는 최근 수년간 동북아 3국 민중 사이에서 유행한

## 포커스 I

‘신민족주의’를 연구한 결과 동북아 3국의 신민족주의는 ‘제국 콤플렉스’와 ‘역사적 영토 콤플렉스’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송청유 교수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자민족의 침략과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것은 근대 역사에 무감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역시 다분히 근대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남긴 사상적 잔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대일본제국’에 연연하며 침략전쟁을 철저히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송청유 교수는 현재 동북아 3국에 존재하는 역사 인식 문제를 정치적 인 것과 학술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한중 양국 사이에는 주로 고대사, 특히 고구려사 인식에서 다양한 견해차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성격의 논란이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송청유 교수는 한중 양국 학계가 협력 연구와 교류를 강화하여 각국의 민족주의에 내재해 있는 역사주의와 문화주의 경향에 대해 깊은 연구와 진지한 반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 민중의 극단적 문화 역사 민족주의를 서서히 극복하도록 인도하고 인류 정의에 입각하여 공통의 가치를 세워 타국(타민족)을 평상심과 포용심을 갖고 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문제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잦은 논쟁, 국가 간 외교적 대립, 관련 당사국 국민 간의 정서적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민족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 문제는 동아시아 각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제이다. 송청유 교수는 신민족주의 분석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역사 현안은 단지 표상(表象)일 뿐이며, 핵심적

동아시아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해  
역사의 진상을  
살피고 역사적  
책임을 가려서  
그에 합당한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 관건은 중국의 부상이 초래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동 및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리팅팅(李婷婷) 교수는 동북아 역사 문제를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부족하며 오히려 민족주의는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는 리팅팅 교수의 분석 방법이 흥미롭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강점과 단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정서의 고조 혹은 저조와 각국 주장의 강점 혹은 단점은 일대일의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역사 인식 문제에는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요인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 내의 쟁점은 피해자중심주의, 소수집단의 이익과 국내 의사결정 절차의 정당성 등의 문제이지만, 이와 같은 국내적 쟁점이 외교적 차원으로 옮겨 가게 되면 한일 양국 정부 간 쟁점의 초점은 국제법적 문제에 집중되게 된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사, 제도, 국내 정치와 국제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은 요원하다.

## 포커스 I

그러나 이 문제가 동아시아 각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 법적, 정치적 책임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해 역사의 진상을 살피고 역사적 책임을 가려서 그에 합당한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각국 정부와 관련 학자, 사회단체 등은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를 중시했다. 김정현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후 한중일 3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수집, 유통, 이용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정현 연구위원은 현재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자료 수집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다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새로운 자료가 대거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연구가 연구사적 장벽을 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김정현 연구위원은 제안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증오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서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김정현 연구위원은 민족주의를 넘어 도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피해자중심주의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활발한 학술교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5. 동아시아 가치와 동아시아 미래

전인갑 교수는 근대 이후 중국의 국민국가(민족국가) 건설 과정을 분석하고, 21세기 중국의 부상이 세계문명사에서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인갑 교수는 근대 이후 중국의 국민국가(민족국가) 건설 과정을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6단계(19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 특색’을 강조한 국가 건설 패러다임은 국민국가(민족국가) 패러다임의 쇠퇴이자 국가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장이다. 전인갑 교수는 이를 자본주의적 건설의 길도, 사회주의적 건설의 길도 아닌 ‘제국성 국민국가’의 길이라고 정의한다. ‘제국’이라는 용어에 대한 학술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 개념을 중국 학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서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주요한 과제다.

전인갑 교수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편가치와 보편문명을 중시했으며, 이를 제국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뿌리 깊은 문화주의적 정치 문화 전통을 유지했음을 강조한다. 유학은 보편가치를 생산하고 보편질서를 운영하는 원리를 제공하였다. 유학이 중국 제국 운영의 원리를 제공한 것이다. 전인갑 교수는 유학으로 대표되는 중화 문화(전통)가 현재와 미래의 중국에서 또다시 ‘제국’의 운영원리로 재소환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는 유학과 유교의 귀환이 당연한 현상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학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유학이 다시 동아시아 공통의 가치 기반이 되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싱리쥬(邢麗菊) 교수가 주목

아직은 학문적 성과가 부족하지만, 양국 학자들이 함께 모여 역사 인식의 공유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 가능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는 그러한 논의의 결과물이다.

하는 핵심 문제다. 근대 이후 한중일 3국 모두에서 유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과 비판의 대상이었고 급격히 쇠퇴했다. 싱리쥬 교수는 근대 이후 한국 유학의 전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유학의 운명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싱리쥬 교수는 한국 유학은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논증하고, 유학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 중시되고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에서 입지를 공고히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자신도 지적했듯이 한국 전통문화에서 유학의 지위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유학을 대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 유학의 위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학은 결과적으로 학술연구와 박물관 전시의 대상일 뿐이며, 현실생활과 갈수록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반전될 가능성은 없다. ‘동아시아론’, ‘아시아 가치’를 논할 때 유학이 자주 거론되지만, 유학이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역사는 현실의 거울이고 미래는 현실의 연속이다. 한중역사포럼 역사분과는 양국의 몇몇 역사 학자들이 단기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일 뿐이다. 아직은 학문적 성과가 부족하지만, 양국 학자들이

---

## 포커스 I

함께 모여 역사 인식의 공유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 가능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는 그러한 논의의 결과물이다. 양국 학자들이 함께 모여 공통 관심사를 공동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통의 가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전인갑(田寅甲, Jeon, In-gap) 서강대 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중국의 '장기 안정성'과 격동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근현대 중국 사회를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현대중국의 제국몽』 등의 논저가 있으며, '제국 전통의 재구성과 중국의 제국몽'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포커스 II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제관계

---

**세계유산: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강동진 경성대 교수

---

**일본의 강제동원 유적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문제점**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해외의 세계유산 등재:  
갈등과 화해 사례**

이현경 인천대 교수

---

**국제적 갈등의 중심에 선  
세계유산, 해법은?**

이현경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 세계유산

##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강동진 경성대 교수



### 1. 들어가며

세계유산 제도는 1972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 17차 유네스코(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이하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다. 세계유산협약의 탄생에는 ‘누비아 유적(Nubian Monuments)의 보호운동’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1950년대 이집트가 전력 수급 등의 이유로 나일강 유역에 댐 건설을 시작하며 이집트와 수단 국경에 걸쳐 입지한 누비아 유적이 수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수몰을 막기 위한 이집트와 수단 정부의 요청(1959)에 대해 유네스코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약 8천만 달러를 모금하며 유적 보호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것이다. 이처럼 인류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유산보호

운동의 모멘텀이 된 세계유산협약은 두 가지 관점 확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첫째는 결과물 자체를 중시하는 문화재 개념에서 ‘전승과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유산 개념의 탄생’이며, 둘째는 ‘국경을 초월하는 유산 보호, 즉 국제협력 필요성의 제기’였다.

1978년 12개소의 유산들이 최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2022년 지금까지 1,154개소(문화유산 897개소, 자연유산 218개소, 복합유산 39개소)가 등재되었고, 후보지인 잠정목록(tentative lists)에도 무려 1,729개소의 유산들이 올라 있다. 시대 흐름상, 세계유산의 일정 분량의 증가는 매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발생하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순수성의 왜곡과 변질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등재를 향한 전 세계 국가들의 열망은 커져 가고 있고, 다량의 유산 보유국들인 이탈리아(58개소), 중국(56개소), 독일(51개소), 스페인(49개소), 프랑스(49개소) 등과 인도, 일본, 이란 등 후발 주자들이 벌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 또한 그러하다.

왜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세계유산을 보유하려 할까?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시대정신의 변화가 주원인인 듯하다. 한때는 마천루 건설 능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

왜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세계유산을  
보유하려 할까?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시대정신의 변화가  
주원인인 듯하다.

력 등이 국가 수준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국가의 상징성과 문화적 권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유산의 양과 질적 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위상이 결정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이 관광산업과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양적 수준이 문화강대국의 수준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세계유산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경쟁 이유의 탐색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의 채택 후 50년 동안 변천해 온 세계유산과 관련된 각종 개념의 확장 과정과 등재 추이에 대한 파악을 통해 과열된 경쟁의 양상들과 그 경향을 이해한다. 또한 2015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철강·조선·석탄산업’의 등재 이후 불거진 등재와 관련된 왜곡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 2. 세계유산 제도의 발전과 진화 과정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최초 제정 이래 수차례의 변화를 거듭하여 왔고, 그 변화의 내용과 결과들이 세계유산 등재의 준거가 되었다. 이후 1977년 세계유산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Operational Guidelines)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에 대한 개략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7년에 제정된 최초 지침은 총 4조 28개항으로 구성되었다. 진정성을 조건으로 하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완전성을 충족해야 하는

## 포커스 II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이 세계유산의 유형으로 정해졌고, 유산 외곽을 둘러싸는 완충구역(buffer zone) 개념도 함께 정립되었다. 1978년에는 세계유산 엠블럼이 제정되었고, 12개소의 세계유산이 최초로 등재되었다. 동시에 위험유산(heritage in danger)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듬해인 1979년 몬테네그로의 ‘코토르 자연·역사문화지구(Natural and Culturo-Historical Region of Kotor)’가 위험유산 1호에 올랐다.

1980년에는 유산 등재의 대상을 기념물(monuments),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sites)으로 정의하였고, 문화유산은 반드시 부동산(immoveable property)이어야 함을 정의하였다. 또한 문화유산에 있어 연속유산(series of cultural properties)과 초국경유산(trans-national heritage)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문화유산의 경우 등재기준 I~VI번(진정성 포함)으로, 자연유산은 VII~X번(완전성 포함)으로,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위험유산을 확실한 위험(ascertained danger)과 잠재적 위험(potential danger)으로 구분하였다. 1987년에는 급증의 조짐을 보이던 도시 내 유산(groups of urban buildings)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고, 정주는 하지 않으나 옛 고고학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towns no longer inhabited),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도시(inhabited historic towns)와 역사적 도심(historic centers), 그리고 20세기 신도시(new towns of the 20th century)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988년에는 확장된 도시 내 유산의 충분한 법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보존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1994년과 1995년은 세계유산에 있어 개념 확장과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였다. 문화유산이 갖추어야 할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가 1994에 발표되면서 문화 다양성

## 포커스 II

과 유산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베니스헌장에 기초한 신뢰성과 진실성의 속성을 진정성의 핵심 준거로 정립하였다. 또한 문화유산 중 유적(sites)의 연계 개념으로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관,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 주변과 결합된 경관을 포괄하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개념이 신규 도입되며 유산의 혁신적인 다양화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이 마련되어 전 인류가 동참하는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이 재정립되었다. 1996년에는 모니터링 기준이 도입되었고, 1997년에는 완전성 기준이 문화유산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문화유산의 등재기준 VI번에 의한 등재 시, 타 기준과의 동시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2005년에는 등재기준이 문화유산(I~VI)과 자연유산(VII~X)으로 일괄 통합되었고, 진정성의 10가지 세부 준거가 마련되었으며, 복합유산(mix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개념도 공식화되었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 논의되던 전략 목표(Strategic Objectives)인 4Cs[Credibility(신뢰), Conservation(보전), Capacity-Building(역량 구축), Communication(소통)]가 정립되었고, 2007년에는 Community(지역사회)를 추가하여 5Cs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2010년부터 논의하던 업-스트림 과정(upstream process) 즉, 자문기구[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가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등재 신청에 대한 사전 자문 과정을 공식 채택하였다. 같은 해, 강제동원 사이트인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등재된 후 20세기와 21세기에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과 연류된 유산(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이란 개념을 공식화하고,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유산의 경우 ‘선 갈등 해소, 후 등재 추진’이라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강제동원의 현장인 군함도(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 포함)

© 강동진

2016년부터 당사국(states parties)당 최소 1유산 보유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19년에 이를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1년 1국가 1유산 신청’ 원칙을 결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산 다보유 국가들의 독주를 막음과 동시에 보유하지 못한 당사국들(2022년 현재 27개국)에 등재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나, 다소 격이 떨어지는 유산의 등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간략하게 살펴본 세계유산협약의 변화 과정은 시대 이념의 변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과정을 거쳐 왔다. 가장 강하게 인지되는 변화는 세계유산의 개념과 영역의 점진적 확장이다. 이는 문화 다

양화 및 글로벌 전략에 근거한 유산의 다각화 현상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과거의 것이라는 유산 자체의 의미로 볼 때, 세계유산 제도는 자칫 권위적이며 고착적인 관념에 빠질 수 있고 또한 발생할 수도 있는 관례들을 깨기 위해 무던히도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왔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과 관련된 국제 활동에 당사국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 특성으로 인지된다.

### 3. 세계유산 등재의 다각화와 그 근거

세계유산협약의 변화 과정은 시대 이념의 변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과정을 거쳐 왔다. 가장 강하게 인지되는 변화는 세계유산의 개념과 영역의 점진적 확장이다. 이는 문화 다양화 및 글로벌 전략에 근거한 유산의 다각화 현상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 (1) 모멘텀을 이룬 주요 사례

세계유산의 등재에 있어 등재가 공감되거나 인정될 때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의외라고 여겨지거나 깜짝 놀랄 정도로 특별한 등재 경우가 등장하곤 한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필자에게 있어 세계유산의 개념과 영역 확장에 기여한 인상적이었던 등재 순간을 꼽아보니 개략 10여 건이 압축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커스 II

### 세계유산의 개념과 영역 확장을 이룬 주요 사례들과 관련 키워드

유산명	등재국	등재 년도	등재 기준	OUV와 관련된 키워드
고레 섬 (Island of Gorée)	세네갈	1978	VI	15~19세기 아프리카 연안지대의 최대 노예무역 현장 / 인간 착취의 역사를 증언 / 기준 VI(사건)으로 등재된 최초 사례
누비아 유적 - 아부심벨에서 필레까지 (Nubian Monuments from Abu Simbel to Philae)	이집트	1979	I, III, VI	세계유산 제도의 탄생 계기를 제공 한 유산 / 60여 개 국의 지원 협력 / 고지대로의 유산 이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 단 학살 수용소(1940~1945) (Auschwitz Birkenau Ger- 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	폴란드	1979	VI	150만의 유태인 학살 현장 / 20세 기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잔인 한 역사를 상징 /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유산 등재의 본격화
바르샤바 역사지구 (Historic Centre of War- saw)	폴란드	1980	II, VI	제2차 세계대전 중 85% 파괴된 도 심을 시민결의를 통해 재건(5년 간) / 유럽의 보존적 도시 개발과 관련한 원칙 설정에 근거 제공
브라질리아 (Brasilia)	브라질	1987	I, IV,	1960년 완공 이후 불과 27년 만에 등재 / 철저한 계획에 근거한 20세 기 근대식 계획도시의 전형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Rice Terraces of the Phil- ippine Cordilleras)	필리핀	1995	III, IV, V	문화경관 유형으로 등재된 최초 유 산 / 2천여 년간 농농사 관련 문화 적 전통의 지속 사례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 (Old Bridge Area of the Old City of Mostar)	보스니아- 헤르체고 비나	2005	VI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전쟁 중 교량 파괴 / 1998년부터 유네스코 와 함께 재건 / 국제협력과 다양한 문화적·민족적·종교적 공동체의 공존과 화해의 상징물

## 포커스 II

유산명	등재국	등재 년도	등재 기준	OUV와 관련된 키워드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 (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	마셜 제도	2010	IV, VI	1946~1958년간 총 67회 핵실험 현장 / 냉전기를 상징하며, 군비 축소 등 국제적 움직임 발생의 근거 제공 / 핵무기의 해악(인간, 자연, 지질, 생물 등)을 설명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들: 근대운동에 대한 탁월한 기여 (The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 Movement)	아르헨티나 외 7개국	2016	I, II, VI	20세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국제주의 건축기법의 발명을 상징 / 17개 유산(7개국)으로 구성된 초국경 연속유산
발롱구 부두의 고고유적 (Valongo Wharf Archaeological Site)	브라질	2017	VI	1831년까지 아프리카에서 남미 대륙으로 이동해 온 90만 이상의 노예들이 도착점 / 아프리카인의 강제이주 역사와 인간성 말살을 보여주는 증거

해당 유산의 OUV와 관련된 키워드는 유산 이전, 분쟁(갈등)유산, 네킨티브유산 또는 불편문화유산, 20세기 유산, 문화경관, 재건축 후 등재된 유산, 냉전기 유산 등이며, 대부분 유산의 개념과 가치 정립과 관련된 시대 변화를 알리는 시금석이 되었다. 선택된 사례들의 대다수가 근현대기의 유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또한 관점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시대적으로 전근대기에서 근현대기로의 이양이 세계유산의 개념과 영역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의 등재는 세계유산이 탁월함을 위주로 하는 다소 고착된 속성에서 벗어나 전 인류와 함께하자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유산 다

각화의 계기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등재 추이에 내재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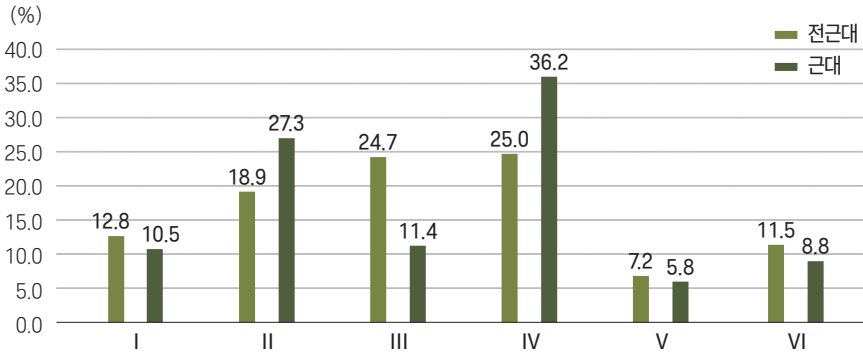
1978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2개소(문화유산 8개소와 자연유산 4개소)가 세계유산에 최초 등재된 이래, 지난 2021년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총 1,154개소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었다. 코로나19로 2020년 단 1년을 제외하고는 쉼 없이 달려온 결과로 이루어진 놀라운 양적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유산협약을 준수하는 당사국의 확장(최초 15개국에서 194개국으로)도 이러한 양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유산의 영역 확장과 유형의 다양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확산이라는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다. 관련하여 발견되는 특징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경유산의 다양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여러 국가들이 함께 등재하는 초국경유산은 현재 43건(전체 유산의 3.7%, 총 67개국 관련)에 이른다. 1979년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가 공동 등재한 ‘오흐리드 지역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Ohrid region)’이 최초 등재된 이래 간헐적으로 등재되는 추세를 보이다, 2010년 이후 매년 2~3개소가 등재되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7개국 중, 독일(10개소), 프랑스(6개소), 이탈리아(7개소) 등이 다량의 초국경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국가의 입지 여건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또 다른 특이한 사실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비율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전체 세계유산 대비 자연유산 비율은 22%(복합유산 포함)에 불과한데, 초국경유산에서의 자연유산 구성비는 무려 44%(복합유산 포함)에 이른다. 이는 여러 국가에 걸

## 포커스 II

문화유산(복합유산 포함)의 등재기준별 비교(전근대/근대)

(2021년 1월 기준)



처 형성되어 있는 면(面)을 이루는 대규모 자연유산들의 등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즉 지구환경 보호 차원에서의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과 환경 파괴에 대한 절박한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등재기준 II와 IV의 점유율(중복 포함) 증가 현상’이다[문화유산(복합유산 포함)에 한정]. 2021년 1월을 기준하여 볼 때,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 사례를 뜻하는 ‘등재기준 IV’가 전체 유산의 평균 약 30%,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하는 ‘등재기준 II’는 평균 약 23%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산업혁명 이후에 탄생하거나 형성된 근현대기 유산들(260여 개소) 중 등재기준 II와 IV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기념비적인 걸작(I)에 해당하는 유산의 등재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가고 있고, 사라진 문명에 대한 증거(III) 또한 양적으로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포커스 II

반대로 다양한 유산 관련 기술과 기법의 전파(II)에 따른 산업공정이나 사건 중심의 건축물군, 그리고 여러 유산들의 합(합)으로 구성되는 특정 주제들(IV)의 발굴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정적인 역사를 가진 유산 증가 현상’이다. 현재 세계유산 중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산은 60여 개소로 조사되며, 유산에 내포된 주제는 전쟁과 학살, 분규와 저항, 강제와 착취, 식민사회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유산들의 등재 이유는 후대에 대한 교훈 제공이 주된 근거이며, 예를 들어 “인류에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후대가 기억하여야 할 독립과 민주화의 저항 현장이다”, “비록 불행한 역사이지만 국제적인 화해와 평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나, 네거티브유산(negative heritage)과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등과 관련된 개념의 확장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4. 마치며

2016년에 발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의사결정구조의 정치화’라는 논문(Enrico Bertacchini·Claudia Liuzza·Lynn Meskell·Donatella Saccone, 2016, “The politicization of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 making,” *Public Choice* v.167, pp. 95~129)을 통해, 2003~2012년에 등재 심사 대상인 290개소 유산들의 등재 과정 중 ‘(전문)자문기구들의 선행 평가 결과와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평가 결과의 불일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유산 등재 과정의 정치적 양상이 비판적으로 논지된 바가 있다. 논문에 의하면 선행 평가에서 등재 미만의 평가를 받은 유산들

중 최종 평가가 변경된 비율이 무려 70.1%(96개소/137개소)에 이르며, 보류(referral)로 선행 평가 받은 유산 중 80.6%(31개소 중 25개소)가 상향 조정되었고, 반려(deferral)의 경우 65%(80개소 중 52개소)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이 순수성을 잃고 정치화되고 있음에 대한 인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를 수치 규명을 통해 학술적으로 공식화한 것이었기에 파장은 컸다. 또 다른 극명한 예로, 2017년 팔레스타인의 헤브론 구시가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자 정치적으로 이견을 가졌던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실 2015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등재 과정도 한일 양국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결과였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은 일본이 주장하는 아시아권 최초의 산업혁명 관련 유산이라는 이면에 강제동원이라는 침략과 인간존엄성 훼손이라는 부정의 세계관이 강하게 내포된 유산이었다. 당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이었던 독일의 중재로 한일 양국을 제외한 모든 위원국의 발언이나 질문이 허락되지 않은 채, 일본 유네스코 대사가 직접 강제동원이 있었음에 대한 인정 발표 후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며 등재는 이루어졌다. 이마저도 일본은 등재 다음 날부터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이 순수성을 잃고 정치화되고 있음에 대한 인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를 수치 규명을 통해 학술적으로 공식화한 것이었기에 파장은 컸다.

## 포커스 II



메이지시대에 폭파로 형성된 V자형 계곡(도유노 와레토)

© 강동진

인정 사실을 왜곡시켰고, 유산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밝히기로 한 등재 조건이자 전 세계인 앞에서의 약속마저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근대기에 국제 사회를 주도했던 강대국들의 (등재를 위한) 과열 경쟁은 자칫 그들이 저질렀던 여러 유형의 부정적인 행위들(식민지개척, 노예수송, 침략전쟁, 강제동원 등)을 미화시키거나 합리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유산은 관련 국가들 간의 상충된 시각으로 인해 국제 분쟁과 갈등의 소지도 가지고 있다. 세계유산은 인류 화합을 최고 가치로 천

## 포커스 II



쇼와시대에 조성된 사도광산의 대표 유산(부유선광장)

© 강동진

명하는 유네스코의 이름하에 인정되는 것이기에, 국가 간의 분쟁 유발 가능성을 가진 유산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인정과 갈등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세계유산은 진정성과 완정성이란 조건 아래 한 점의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유산에 대한 모든 것이 진짜이고 진실되어야 함은 물론 관련국들 간의 상호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1일 사도광산(佐渡島の金山)의 세계유산 등재를 또다시 천명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시 강제동원이 자행되었던 현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아베 전 총리까지 나서서 사도

광산의 등재 추진과 한국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사도광산의 등재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등재 과정과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유산의 형성 시기를 ‘센코쿠시대 말~에도시대’로 한정하여 강제동원과 중첩되는 시기를 벗어나고, 강제동원과 관련된 유산들은 제외시켜 논쟁거리를 제거한 후 등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도광산은 세계유산 유형 중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하는 문화유산에 속한다. 일본 스스로 이전부터 설명해 온, 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도광산의 유산들은 모두 메이지시대와 쇼와시대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그것들은 제쳐 두고 지하의 것과 혼적으로 남은 터만으로 유산의 OUV를 설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은 물론, 유산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예견된다.

**해당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등재를 이용하고, 또한 자국이 벌인 역사를 왜곡하는 도구로 등재를 활용하는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고 지양되어야 한다.**

사실,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과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반하여 국제 NGO나 국제기구의 관심 어린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세계유산을 향한 유네스코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당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등재를 이용하고, 또한 자국이 벌인 역사를 왜곡하는 도구로 등재를 활용하는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고 지양되어야 한다.

## 포커스 II

1972년 이래 50년 동안 진행된 세계유산의 변천사는 급변했던 지난 시대에 공의롭게 맞서며, 인류 문화와 자연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일에 진력했다. 특히 모든 인류와 모든 국가들 중 어느 한 곳도 소외됨 없이 그들의 삶에 기반이 되어 온 문화와 자연을 다양성이란 이름하에 모두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굳건한 다리를 놓았다. 2022년은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지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니만큼, 한발 더 나아가 유산 다양성의 추구에 있어 보다 더 진실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공의로운 등재 과정이 정립되어 가길 기대해 본다.

### 강동진(姜東辰, Kang, Dong-jin)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 문화, 자연, 경관 등을 키워드로 하는 도시설계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산업유산, 근대유산, 세계유산 등을 주제로 하는 각종 지역문화운동과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ICOMOS 한국위원회 이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 일본의 강제동원 유적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문제점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문제의 씨앗, 군함도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나가사키시 남동쪽 해안, 나가사키 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함도(軍艦島)라고 불리는 섬이 있다. 본명은 하시마(端島), 한때는 해저탄광으로 유명했다. 이 때문에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의 자본이 손을 뻗쳐 섬 주위를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성벽과 같은 구조물을 쌓아 인공 섬을 만들었다. 그 모습이 전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군함도이다. 마치 군국주의 일본의 과거가 화석처럼 남아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19세기 초엽부터 채탄을 시작했던 군함도는 1970년 상업성을 잃고 폐광되었다. 과거의 영광은 바다에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런 군함도가 다시 일본 사회에서 '유망'해진 것은 2015년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 포커스 II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 동북아역사재단

으로 등재되면서부터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를 비롯한 일본 열도 8개 현에 산재한 23개의 유적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 명명하고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 처음 석탄이 발굴된 지 약 200년, 폐광한 때부터는 40년이 지난 후였다. 그런데 과연 화석과 잔해만 남겨져 있던 군함도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세계유산 등재 대상이 되었을까.

나가사키시가 군함도를 처음 일본 문화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한 것은 2006년 11월이었다. 당시 군함도는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 산업유산군’의 하나로 목록에 올랐다. 이때 함께 잠정목록 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유적 중에 야마구치현(山口縣) 하기(萩)의 쇼카 손주쿠(松下村塾)가 있다. 주지하듯 쇼카 손주쿠는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알려진 조그마한 서당이다.



세계유산이 된 쇼카 손주쿠

© 동북아역사재단

이 작은 서당이 ‘근대화 산업유산’의 하나로 선정된 까닭은 이곳에서 일본의 근대화·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쇼카 손주쿠는 웅색한 전근대식 교육시설의 하나일 뿐이다. 근대화에 공헌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는 해설은 그저 신청서 목록에 올리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쇼카 손주쿠가 산업유산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아베 전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쇼카 손주쿠가 그의 정치적 고향이자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 위치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쇼카 손주쿠 등이 산업유산군이 된 2006년은 아베 신조가 제90대 내각총리대신이 된 해다. 요컨대 아베가 총리가 된 것과 궤를

같이하여 그의 지역구에 있는 쇼카 손주쿠가 산업유산군이 되었고, 여기에 규슈의 고쿠라(小倉)와 나가사키 일대의 진짜 산업유산이 덧붙여져 신청서 목록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군함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야마구치의 작은 서당을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다. 군함도와 쇼카 손주쿠는 한몸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거기에는 일본 보수 강경파의 정치적 의도와 야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쇼카 손주쿠가 됐든 군함도가 됐든 그것이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군함도 등의 산업유산이 일제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었으며, 무엇보다 그곳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이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쇼카 손주쿠 역시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했던 자들의 본거지였고, 이곳에서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가 발원했던 만큼 역시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군함도와 쇼카 손주쿠가 한데 묶여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식민의 역사가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역사

군함도와  
쇼카 손주쿠는  
한몸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거기에는 일본 보수  
강경파의 정치적  
의도와 야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 포커스 II

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일과 다름없다. 군함도와 쇼카 손주쿠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미 생명을 잃고 산화하기 직전의 제국주의가 다시금 피와 살을 얻어 부활하는 분명한 신호였다.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는 애초부터 일본 우익의 정치적 의도 아래 치밀하게 계획·추진된 것이었고, 때문에 이와 유사한 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2. 2020년 3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의도된 왜곡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와 쇼카 손주쿠 등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등재 불가 입장을 전하며 외교 활동을 펼쳤다. 결국 일본 측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대사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더불어 피해 사실이 포함된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0년 3월에야

도쿄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sup>1</sup>에는 일본 대사가 약속했던 강제동원과 피해의 역사적 사실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적인 노역은 없었고 “조선인 노동자들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생활했다는 증언이 전시되어 있었다. ‘혹시’ 했던 마음은 한순간 ‘역시’로 변했다.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모두 세 개의 전시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공간은 ‘도입전시(導入展示)’로 메이지기 산업혁명유산의 개요와 세계유산 등재 경위 등을 전시하고 있다. 두 번째 공간은 ‘메인전시’로 ‘산업국가를 향한 귀적’이라는 주제 아래 요람(搖籃)의 시대, 조선(造船), 제철과 제강, 석탄산업, 산업국가를 향해 등 다섯 개의 코너로 구성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은 ‘자료실’이다.

첫 번째 ‘도입전시’ 공간에는 사토 구니의 발언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애초 사토 대사가 발언했던 원문의 ‘forced to work(강제적인 노역)’가 ‘일하게 된’으로 오역되어 있다. 명백히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메인전시’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메인전시’ 패널을 통해 하시마탄광, 즉 군함도에서 노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나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1 산업유산정보센터는 2020년 3월 개관 직후 휴관했고, 일반 공개는 6월이 돼서야 가능해졌다.

2021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한 후 “(일본이) 관련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전시해 놓았다. 대다수 피해자들의 강제 노동과 민족차별에 관한 증언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항의 성명을 내는 동시에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역시 2020년과 2021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산업유산과 관련된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sup>2</sup>

일본의 약속 불이행, 그리고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기만적인 전시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도 일침을 놓았다. 2021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한 후 “(일본이) 관련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Strongly regrets however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the relevant decisions)”고 밝혔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는 2022년 12월까지 일본 정부에 다시금 약속 이행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토록 요구

<sup>2</sup> 동북아역사넷,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contents.nahf.or.kr/item/item.do?itemId=isjs).

했다.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거북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들이 군함도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 3. 사도광산에서 무시된 조선인 강제동원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분명했다. 일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일본이 추진했던 강제동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는 이로써 전기를 맞는 듯 보였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약속 이행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가타현(新潟縣) 사도섬(佐渡島)에 소재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자 사태는 다시 급변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10년경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일본 국내 다른 후보들에 밀려 고배를 마셔왔지만 등재 추진은 끊이지 않고 강행되었다. 우리 정부와 학계는 사도광산 역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의 현장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사도광산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148명의 피해 사실이 드러난 바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와 미쓰비시광업이 생산한 관련 명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여러모로 무모해 보였다. 사도광산의 경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었고, 또한 군함도 등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국제사회에서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말까지만 해도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등재 신청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도

## 포커스 II



사도광산의 상징인 도유노 와레토(道遊の割戸)와 광석 운반용 화차

© 동북아역사재단

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한 일본 의회 내 강경파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을 향해 등재 신청서 제출을 강하게 압박했다.

2022년 1월 19일,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후원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사도광산 등재가 “일본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의 추천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도 1월 26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역사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겨 기시다 내각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결국 기시다 내각은 신청 보류 결정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1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유산센터에 사도광산 등재 추천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제출 당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관방 부장관보(補)

## 포커스 II

를 단장으로 사도광산 등재를 위한 첫 번째 태스크 포스 회의를 열었다. 3월 28일에는 자민당 의원들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의원모임을 발족했다. 회장으로서는 1980년대에 세 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의 장남이자 전 외무상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가 선출되었다. 의원모임에는 아베 신조는 물론 아소 다로(麻生太郎),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등 자민당 내 주요 강경파를 비롯하여 100여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일본 정부는 한번 방향을 선회하자 거침이 없었다. 군함도 등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과 관련한 약속 이행이 아직 현안으로 남아 있는 와중에 사도광산의 등재 추진을 다시금 감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아베 전 총리 등 일본 보수 강경파 정치인들의 바람대로 성사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당사국 간의 우선 협의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2015년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일본 정부의 반발에 따라 세계유산 심사제도가 개편된 바도 있었다. 당시 제도 개편을 주도했던 일본 정부는 누구보다 관련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사도광산 역시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등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를 리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내세운 꿈수는 사도광산의 역사 중 일부만을 세계유산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적 가치가 메이지 이전의 “전통 수공업에 기반한 금 생산 시스템”에 있다고 하면서 근대 산업화 이후의 유적을 세계유산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즉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유적은 근대 산업화 이후의 것이니 이번 등재 대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강변(強辯)이었다.

일본 정부의 꿈수는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 ‘사도’를 온전히 ‘사도’라 부르지 못하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못 본 척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세계유산에 등재만 시키면 된다는 오만과 무모함이 드러난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꿈수는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 ‘사도’를 온전히 ‘사도’라 부르지 못하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못 본 척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세계유산에 등재만 시키면 된다는 오만과 무모함이 드러난 것이었다.

#### 4. ‘제2의 군함도’, ‘제3의 사도’에 대비하여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이뤄질까. 현재로서는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신청서 심사와 현지 실사를 잘 대비하여 세계유산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코모스는 2022년 하반기 사도광산 현지 실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코모스는 실사 내용을 토대로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중 하나를 최종 의견으로 도출한다. 여러모로 이코모스가 등재 불가 의견을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소한 보류나 반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깃발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한다.

이코모스가 실사를 통해 내린 의견은 2023년 6월로 예정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주의할 점은 이코모스의 의견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위한 권고 사항이라는 사실이다. 이코모스에서 등재 권고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코모스의 실사에 잘 대비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설득도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금년 6월 러시아 카잔에서 예정되었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4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과 영국 등 46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문화유산 파괴에 반대하여 러시아 내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 자체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개최 장소를 러시아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세계유산위원회 측에 무기한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네스코 측은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향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내년도 회의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또 있다. 영토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악화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일본의 등재 시도를 반대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만장일치로 등재 여부를 판단해 온 세계유산위원회 관례상 러시아의 반대는 일본에게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많다. 잘 알려져 있듯 유네스코 내 일본의 입김은 일본이 지불하는 분담금만큼이나 막강하다. 일본이 광범위한 선전전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의 판단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도한다면 최

일본은 이미  
근대시기 자국의  
산업유산 중 여러  
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군함도와 사도는  
그 시작일 뿐이다.  
'제2의 군함도',  
'제3의 사도'가  
언제든지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 포커스 II

종 결정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된다. 더욱 경계해야 하는 점은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일본의 역사전쟁 도발이 ‘사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근대시기 자국의 산업유산 중 여러 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군함도와 사도는 그 시작일 뿐이다. ‘제2의 군함도’, ‘제3의 사도’가 언제든지 세계유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대상이 될 만한 장소를 미리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최종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3, 제4의 사도광산에 대한 등재를 추진할 것이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방도는 없는 것일까.

### 조건(曹健, Cho, Ge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국대에서 한국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사도광산과 인천육군조병창 등 일제 강제동원 유적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해외의 세계유산 등재 갈등과 화해 사례

이연경 인천대 교수



일본은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이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시도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민족 간 갈등요소가 된 건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또 다시 갈등의 기폭제가 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Temple of Preah Vihear), 그리고 갈등을 넘어 피스메이커(Peacemaker: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 스타리 모스트(Stari Most) 다리의 사례를 통해 해외의 세계유산 중 갈등과 화해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민족 간 갈등요소가 된 건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 1. 소유권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인 갈등: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사례

캄보디아의 북쪽 고원에 위치한 프레아 비헤아

## 포커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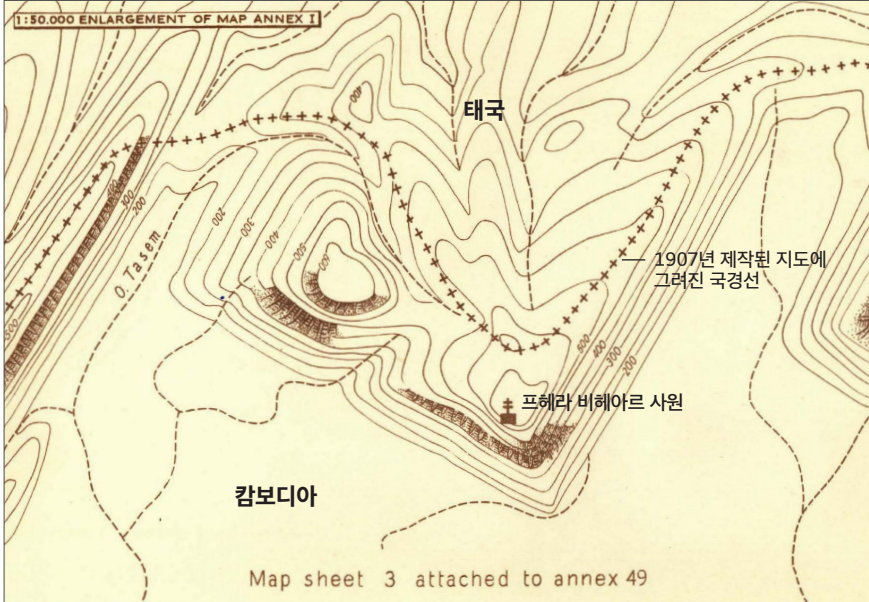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 UNESCO

르 사원은 11세기경 힌두교의 시바신을 위해 건립된 신전이다. 800m에 이르는 긴 축의 계단과 도로를 따라 여러 개의 신전들이 배치된 이 사원은 크메르왕조 건축 특유의 아름다운 조각 및 주변 풍광과의 환상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곳이다. 원래 힌두교 은둔자의 공동체 사원이었던 프레아 비헤아르는 캄보디아의 북서쪽 경계이자 태국의 남동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20세기 동안 캄보디아와 태국, 그리고 프랑스 사이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의 장소가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강대국인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두 나라 사이에서 15~16세기를 거치며 거의 그 힘을 잃어갔다. 베트남과 태국을 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는 1863년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프레아 비헤아르를 둘러싼 경계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1867년 프랑스와 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에서 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중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프레아 비헤아르를 포함하는 크메르왕국 북서부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나 점차 인도차이나반도에서 프랑스의

## 포커스 II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경계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1907년 제작 지도 [출처: ICJ Pleadings, Annex 49, map sheet 3 (Sept. 8, 1961) 위에 필자 표기]

세력이 강해지자 태국은 영토의 상당 부분을 프랑스에 내어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둘러싼 분쟁의 단초가 된 ‘1904년 조약’을 맺게 되었다. ‘1904년 조약’ 체결 이후 프랑스와 태국이 공동으로 조직한 위원회에서는 조사팀을 꾸려 캄보디아 북서부를 실측하고 1907년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당시 프랑스 측이 주도하여 작성한 지도에서의 국경선은 1904년 조약 내용에서 언급된 대로 당릭산맥의 유역선이 아닌, 프레아 비헤아르의 북측으로 설정되었다. 당시 태국은 이 지도를 승인하였고, 이 지도는 이후 인도차이나반도 내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로서 역할하였다.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의 세력이 약화되

유네스코는  
2008년 7월 8일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캄보디아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자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탈환하여 카오 프라 비한이라는 이름의 국가기념물로 등록하고자 하기도 하였으나 1945년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1954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되자 태국은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점령하였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둘러싼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 소유권 분쟁은 1962년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었다. 태국은 1907년 지도 제작이 잘못 되었음을 주장했지만, 오랜 시간 태국이 그에 대해 반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포함된 1907년의 지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캄보디아의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즉, 반정부군인 크메르루주군이 이곳을 점유하고 지뢰를 설치함으로써 그 누구도 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98년 크메르루주군의 철수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소유권이 다시 한 번 분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 준비하던 2007년이였다. 태국은 당시 프레아 비헤아르 사

## 포커스 II



무력 충돌을 끝내고 평화의 시간으로 돌아온 프레이아 비헤아르 사원 © UNESCO

원을 태국과 캄보디아 공동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네스코는 2008년 7월 8일 프레이아 비헤아르 사원을 캄보디아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프레이아 비헤아르 사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2013년 또 한 번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사원과 주변 일대의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인근에 있던 태국군 전원이 철수함으로써 오랜 시간의 무력 충돌을 끝내고 평화의 시간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태국과 캄보디아 힌두교 은둔자들의 공동체 사원이었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광의 프레이아 비헤아르 사원은 오랜 시간 전

쟁으로 인해 수없이 파괴되었고, 은둔자들 대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장소가 되었으며, 여전히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갈등 요소로 그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 2. 갈등을 넘어 피스메이커로: 스타리 모스트 다리 사례

네레트바(Neretva)강 깊은 계곡에 위치한 역사도시 모스타르(Mostar)와 스타리 모스트 다리는 오랜 시간 내전으로 인해 상처 입은 도시와 다리를 복원하며 갈등을 치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 종교가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화해의 상징과 같은 장소이다.

모스타르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의 주요 도시로 실제적으로는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역할을 한 도시이다. 우리에게서 보스니아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곳이다. 이같이 혼종적인 성격이 형성된 것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 지역은 1세기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4세기까지는 서로마제국의 일부였으나, 이후 게르만, 슬라브, 그리고 헝가리를 거쳐 1463년 이후 400여 년간은 오스만제국에 점령되었다. 그러나 1831년 이후 반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1898년 오스만제국은 물러가고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 1918년에는 유고슬라비아왕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91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이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에서는 유고슬라비아에 잔류하길 원하는 동방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르비아인과, 유고슬라비아에서



붕괴 이전의 스타리 모스트 다리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ostar\\_The\\_Old\\_Bridge\\_-\\_Stari\\_most\\_1979\\_g\\_-\\_panoramio.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ostar_The_Old_Bridge_-_Stari_most_1979_g_-_panoramio.jpg))



1993년 파괴 이후 임시로 설치한 다리 모습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tari\\_Most\\_temporary\\_cable\\_bridge\\_1997.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tari_Most_temporary_cable_bridge_1997.jpg))

## 포커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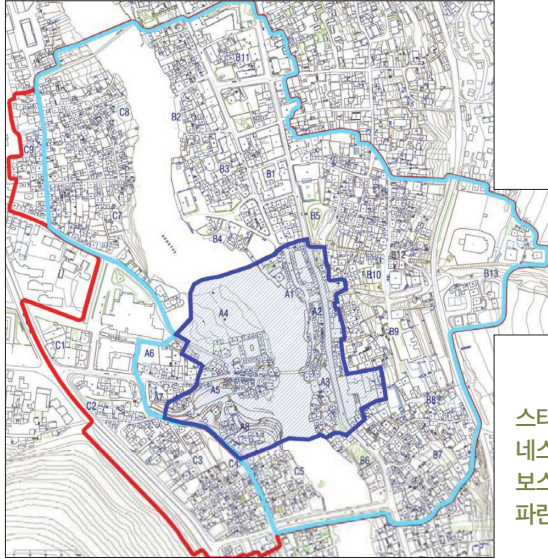
모스타르 시가지와 스타리 모스트 다리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tari\\_Most\\_viewed\\_from\\_North.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tari_Most_viewed_from_North.jpg))

독립하길 원하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보스니아인,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크로아티아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며 1992년 보스니아전쟁이 일어났다. 세르비아인과 보스니아인, 크로아티아인은 각각의 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분쟁 과정에서 상대 민족에 대한 학살행위가 벌어졌다. 보스니아전쟁은 1995년 데이턴협정이 체결되며 종결되었고, 현재와 같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이라는 이름의 연합국가가 되었다.

이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모스타르에는 보스니아인의 무슬림문화와 크로아티아인의 가톨릭문화, 그리고 세르비아인의 정교회문화가 혼종적으로 나타났다. 모스타르에는 오스만제국 당시 건설된 모스크와 터키식 주택들, 목욕탕, 시장, 그리고 오스만제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미마르 시난(Mimar Sinan)의 제자 하이르 웃딘(Hayr-uddin)이 설계한 스타리 모스트 다리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로마가톨릭 성당과 수도원을 비롯하여 지중해식, 서유럽식 주택과 도시 조직 등이 남아 있어 이 마을의 오래된, 그

## 포커스 II



스타리 모스트 다리와 모스타르 지역 유네스코 지도(붉은색은 버퍼존, 하늘색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구도심 경계, 파란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구역)

© UNESCO

리고 다양한 시간을 보여준다. 스타리 모스트 다리가 위치한 모스타르 중심부는 오스만제국 당시 중심부였던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별 공간 분리가 심화되어 네레트바 동쪽에는 무슬림 보스니아인이, 서쪽에는 가톨릭 크로아티아인이 주로 거주하였다. 모스타르의 중심부에 위치한 스타리 모스트 다리는 1566~1567년 건립된 것으로, 건립 당시 길이 28m, 높이 20m에 이르는 아치형 다리에 양 끝에는 탑이 위치하고 있는, 발칸 이슬람건축의 대표적인 구조물이었는데, 1993년 5월 보스니아 전쟁 당시 크로아티아군의 포격을 맞아 완전히 파괴되었다. 1995년 보스니아전쟁이 종식되자 유네스코와 세계은행은 스타리 모스트 다리와 모스타르 구시가지 재건을 위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8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타리 모스트 다리 복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2001년

6월 7일부터 오스만제국 당시의 건축 자재와 기술을 도입, 다리 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7월 23일 준공하였고, 20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스타리 모스트 다리와 모스타르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복원된’ 다리이기 때문에 ‘원형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오스만제국 당시의 건축기술과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진정성 있는 복원을 추구하였으며, 무엇보다 인종·종교·문화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던 도시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스타리 모스트 다리는 ‘인종청소’와 ‘전쟁’이라는 아픈 기억을 지나, ‘평화’와 ‘화해’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게 반영된 공간이라는 ‘피스메이커’로 재탄생하였다. 비록 복원된 다리이지만, 스타리 모스트 다리는 어쩌면 유네스코정신에 가장 적합한 유산일지도 모르겠다.

스타리 모스트  
다리와 모스타르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인종·종교·문화적  
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던  
도시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 3. 철원 금강산 전기철도교량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과 스타리 모스트 다리의

## 포커스 II

사례를 살펴보자니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 끊어져 버린 다리인 철원 금강산 전기철도교량(국가등록문화재)이 바로 그곳이다. 역사 기억 문제로 인해 갈등의 현장인 동시에, 가고 싶어도 더 갈 수 없는, 갈등이 유보된 현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징용의 현장이 일본 등 해외 곳곳에 남아 있다면, 국내에는 부평 구 일본육군조병창, 해남 옥매광산 등을 포함한 강제동원 현장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이곳들은 과연 스타리 모스트 다리처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혹은 프레아 비헤아르처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될까? 그것은 이곳을 어떤 장소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너와 나, 우리에게 달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연경(李妍璟, Lee, Yeon-kyung)** 인천대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서울 및 인천의 근대도시화 과정 및 건축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산업도시 및 산업유산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국제적 갈등의 중심에 선 세계유산, 해법은?

이현경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평화유산인가? 갈등유산인가?

2022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협약이 공포된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은 무력전쟁, 자연재해로 인해 위협에 처한 유산의 구원자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산의 존재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관 역할을 담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산이 개인 혹은 국가의 소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자산임을 표방하여 유산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일조하였고, 그 유산을 함께 보호하고 향유하는 세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에 세계유산은 각국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유산 협약은 유네스코 평화구축

(peace-building)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여름, 평화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를 잇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새로운 등재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등재 소식은 등재 당사국에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다른 국가 또한 새로운 세계유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사국과 다 함께 축하하며 평화의 축제에 동참한다. 하지만 2015년 독일 본(Bonn)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이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은 모두에게 희소식이 아니었다. 총 23개 연속유산으로 구성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등재된 것은 아시아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룬 장소로서 유네스코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은 결과다. 따라서 일본은 메이지 시대 산업 발전을 이룬 영광스러운 기억의 장소로 이 유산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3개의 연속유산 중 군함도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식민지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의 강제 노역의 고통이 서린 아픔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및 강제 노역의 아픔을 경험한 개인은 일본이 세계유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날 선 논쟁은 세계유산 제도를 통해 진화된 형태의 동아시아 기억 전쟁, 역사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2022년 2월 일본이 한국인 강제 노역의 장소였던 사도광산을 에도시대의 산업유산 요소를 강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유사한 형태의 한일 갈등이 유네스코 기구로 옮겨져 다시 한 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비단 한국과 일본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페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유산  
관련 갈등은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산 관련 갈등은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국제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이제 그 갈등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2.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

세계유산과 관련한 국제적 갈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경우는, 세계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장소가 최근의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경우다. 2018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최근의 분쟁과 연관된 기억의 장소(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이하 기억유산) 비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유산이 세계유산의 범주와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sup>1</sup> 여기에서 최근(recent)의 시간 범주는 20세기와 21세기이며, 분쟁(conflicts)은 전쟁(wars), 전투(battles), 학살(massacres, genocides), 그리고 여러 당사자의 상반된 견해가 얽힌 부정적인 사건(other negative events involving opposing views of several

<sup>1</sup> ICOMO, 2018, ICOMOS Discussion Paper: Evalu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https://whc.unesco.org/document/167810>).

parties)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벨기에와 프랑스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 및 기념의 장소(서부전선)(Funeral and memorial sites of the First World War(Western Front))’를, 그리고 르완다가 르완다대학살과 관련된 장소를 세계유산에 등재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유네스코와 이코모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유산이 지닌 무형적 가치와 속성이 유형적인 요소와 맞물려 시각적인 완전성과 진정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유네스코와 이코모스는 기억유산의 경우 그 장소의 역사적 ‘기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세계유산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유형적 요소가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79)와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돐)’(1996)과 같이 기억유산 범주에 속한 장소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도 있지만, 유네스코와 이코모스는 이 사례들이 예외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2</sup>

<sup>2</sup> ICOMOS, 2018, ICOMOS Discussion Paper: Evalu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https://whc.unesco.org/document/167810>).

또한 유네스코는 기억유산 지정으로 한 장소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이루어져 관련 당사국 간에 정치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

를 중시하는 유네스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억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국가는 분쟁 피해 당사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당사국이 서술하는 유산의 내용이 객관적이기 어렵기에 세계유산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코모스 및 유산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sup>3</sup> 이는 유네스코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처럼 한 장소에 얽힌 서로 다른 기억으로 인한 국제적 충돌을 경험하면서, 국제 분쟁의 조정자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 정의의 심판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네스코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다수의 회원국은 여전히 선진국 중심, 즉 식민지, 전쟁의 가해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해국의 기억유산이 세계유산이 되어 전 세계인의 추모 공간이 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서 시작된 세계유산 제도가 이제 21세기 새로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대결 양상을 보여주는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으며, 세계유산 등재 이면에 숨겨진 국제적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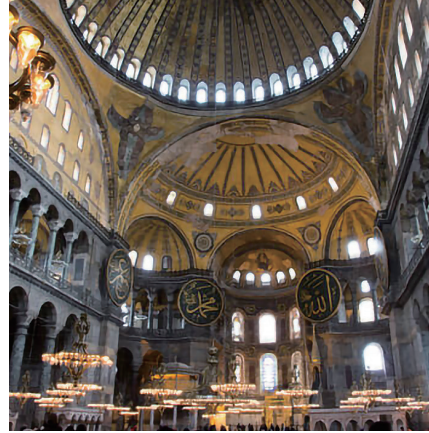
두 번째 갈등 양상은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혹은 등재될 세계유산이 한 국가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서 나타난다. 이는, 각 국가가 추구하

**3** ICOMOS, 2020, ICOMOS Second Discussion Paper: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an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flection on whether and how these might relate to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http://openarchive.icomos.org/id/eprint/2368/>).

## 포커스 II



터키 성 소피아  
© M&G Therin-Weise from UNESCO



터키 성 소피아 내부  
© Limes.Media Tim Schnarr from UNESCO

두 번째  
갈등 양상은 ...  
각 국가가 추구하는  
자국 중심주의와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주의의  
충돌이다.

는 자국중심주의(nationalism)와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표적 갈등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터키의 성 소피아(Hagia Sophia) 박물관이 모스크(mosque)로 전환된 사례이다. 세계유산 '이스탄불 역사지구'에 속한 성 소피아 박물관은 본래 그리스정교회 성당으로 건립되었으나 이후 오스만제국에 의해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워진 터키공화국에 의해 1934년에 박물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은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이 만나 형성한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건축학적 가치

를 인정받아 터키 최대의 관광명소로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터키 정부는 이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네스코,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터키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 유감을 표명하였다.<sup>4</sup>

터키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슬람주의를 앞세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종교적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각 나라의 유산은 긍정적인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방편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터키 정부의 선택은 자국 중심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 소피아 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국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의미는 한 국가를 넘어 인류의 유산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산이 위치한 국가는 세계인이 누릴 수 있는 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관리인(stewardship)의 책임이 있다. 유네스코 성명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 유산은 문화 다양성의 소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

4 Orla Guerin, 2020, Hagia Sophia: Turkey turns iconic Istanbul museum into mosque, BBC NEWS, 10 July(<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3366307>).

정반아 세계유산 등재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원래 세계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던 장점이 특정 종교적 장소로 방문객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터키 정부는 이 유산은 터키의 국토 안에 있는 터키의 유산임을 거듭 밝히며 터키의 유산 소유권(ownership)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되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갈등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나 사도광산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과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본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산업유산으로 기념하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이 각 유산의 특정 시기만을 강조함으로써 전쟁 중 강제 노역의 장소로서 새겨진 기억유산의 속성을 그 장소의 기억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우익의 역사수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유산 제도를 활용하여 자국중심주의 세계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장소와 관련된 당사국을 배려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는 유네스코 국제주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통한  
갈등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유산  
관리에 개입되면서  
...  
세계유산의 의미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통해  
나타난다.

## 포커스 II



울루루 카타 추타 국립공원  
© Emmanuel Pivard from  
UNESCO

5 UNESCO, Uluru-Kata Tjuta National Park, World Heritage List(<https://whc.unesco.org/en/list/447/>) (Accessed on April 21, 2022).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을 통한 갈등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유산 관리에 개입되면서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의 의미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통해 나타난다. 최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호주의 울루루 카타 추타 국립공원(Uluru Kata Tjuta National Park)은 오스트레일리아 중부의 광활한 붉은 모래 평원에 형성된 특별한 지질 구조를 특색으로 지닌 문화경관이다.<sup>5</sup> 이 국립공원은 1987년 자연유산으로서 에어스록마운트 올가 국립공원(Ayers Rock-Mount Olga National Park)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

## 포커스 II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하지만 1983년 호주 수상이 국립공원의 소유권을 코먼웰스 정부로부터 원래 거주하던 아난구(Anangu) 원주민에게 넘겨주었고, 원주민은 이 국립공원의 이름을 원주민의 언어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 공원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일 뿐만 아니라, 원주민 부족이 지켜온 전통신앙체계가 존재하는 문화경관임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호주 정부와 원주민 간의 오랜 논쟁, 그리고 유네스코의 재검토 작업을 통해, 1994년 원주민의 삶과 연계된 이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유산의 기준 VI’을 추가하였고, 정식 명칭 또한 원주민 언어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베트남의 풍나케방 국립공원(Phong Na-Keh Bang National Park) 역시 자연유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이 장소에서 살았던 원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역시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의 성취 뒤에 숨겨진 원주민, 여성, 노예, 강제 노역 등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이 세계유산에 대한 다층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이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및 사도광산에 강제 노역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와 관련 자문기구는 이러한 재평가가 이미 확립된 등재 유산의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유럽 중심, 엘리트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담론에 다양한 층위의 이해당사자 목소리가 개입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유네스코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불협화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 3. 평화로 향하는 열쇠,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의 재해석

지금까지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평화의 상징이었던 세계유산이 다양한 국제적 갈등의 발현지가 된 이유는 지난 50년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있다. 세계유산 프로그램이 출범되었을 당시, 무력 충돌로부터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문화전쟁시대로 변모하였고, 새로운 국제 지형에 맞춰 ‘평화’의 정의도 새로워져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세계유산은 국제기구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세계유산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문화전쟁에서 공공외교의 핵심 무기가 되었기에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세계유산을 향유하는 계층이 다양화되고, 그간 소외되었던 세계유산 지역의 공동체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유산은 출구 없는 갈등 구조 속에 갇혀 버린 것일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이제는 평화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세 가지 측면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유네스코 ‘평화’의 의미를 새로운 국제질서 안에서 재정립하는 기회를 주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유네스코  
'평화'의 의미를  
새로운 국제질서  
안에서 재정립하는  
기회를 주었다. ...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반증 ... 국제적 갈등  
심화는 세계유산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서 평화는 아무런 갈등, 충돌이 없는 상태를 지칭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화전쟁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국제적 갈등은 필연적임을 직시해야 한다. 즉, 평화는 명사가 아닌 동사, 정답이 아닌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국제적 갈등은 다양한 층위의 상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며 소통의 시발점이 된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재해석하고 싶다. 세계유산 프로그램은 유산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 수 있을 만큼 유산 이해 범주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갈등은 각국이 세계유산의 등재에만 치중하는 경쟁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유산의 다양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제적 갈등 심화는 유네스코 기관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세계유산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유산의 의미는 유네스코를 통해 하향식(top-down)으로 전달되는 구조

였고, 세계유산의 장소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중심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 이야기의 공존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왔고 국제 갈등으로까지 발전되었다.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회의에서 웨일스의 산업유산경관이 등재되었을 때, 유네스코와 영국은 이곳을 영국 슬레이트 산업의 특징을 보여주는 독특한 경관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서 스티브 큐션(Steve Cushion) 박사는 본인이 펜넨트(Pennant) 가문의 후손임을 밝히면서 이곳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자본의 출처는 펜넨트 가문이 자메이카에서 노예노동을 통해 얻어진 수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경관 뒤에 숨겨진 희생과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sup>6</sup> 이와 같이, 유네스코와 자국이 다루지 않은 유산의 의미는 일반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sup>6</sup> Steve Cushion, The links between Welsh slate and slavery. *The Guardian*, 2021 July 30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jul/30/the-links-between-welsh-slate-and-slavery>).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억유산에 대해서 세계유산의 목적과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과 브라질 대표는 그 결정에 대한 재고를 표명하였다. 현재

## 포커스 II

세계유산 협약국들을 중심으로 한 워킹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갈등유산이 세계유산의 목적과 범주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기억유산에 대한 이해 및 범주를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록 이상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고 하고, 세계유산에 유연성을 더해 가는 유네스코의 노력은 새로운 변화로의 적응이라고 풀이된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적응과 더불어, 시민의 유산에 대한 태도가 또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시민들은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관망하고, 비판하며, 유네스코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공유유산이며 유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세계유산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며, 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 소통으로서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현경(李炫炅, Lee, Hyun-kyung)** 한국외국어대 문화유산연구센터 연구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유산학 연구자로서 세계유산분야 문화재전문위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불편문화유산(냉전유산, 식민유산) 연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및 평화담론 연구를 진행 중이다.



#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Vol. 1

Summer 2022

**Opening Remarks** Lee, Young-ho

**Message from the Editor-in-Chief** Kim, Hyun-chul

## Guest Essays

**Reflections on East Asia: The Likelihood of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Choi, Sang-yong

**The First Step toward Korea-Japan Reconciliation: How to Overcome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Article 2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ada Haruki

## Focus I

### Convers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The Korea-Japan Forum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 Joint Research Project by Korean and Japanese Historians**

Nam, Sang-gu

***Korea-Japan Dialogue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chievemen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Chung, Jae-jeong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on Conflict, Cooperation, and Competition: Significance of Academic Exchange**

Cha, Jae-bok

**The Origins of Nationalistic Perceptions of History and Challenges in Korea and China: Toward a Shared Historical Perception**

Jeon, In-gap

## Focus II

### UNESCO World Heritag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hat Is UNESCO World Heritage, and Why Did UNESCO Make It?**

Kang, Dong-jin

**Japan's Attempts to Inscribe Forced-Labor Sit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Cho, Geon

**UNESCO World Heritage Sites Overseas: Cases of Dispute and Reconciliation**

Lee, Yeon-kyung

**UNESCO World Heritage in the Center of International Conflicts: What is the Resolution?**

Lee, Hyun-kyung